

경제주평

■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

- 2차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의 수출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목 차

■ 「트럼프 노믹스 2.0」 과 한국 경제

- 2차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의 수출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1
2. 예상되는 「트럼프 노믹스 2.0」 의 방향	4
3. 「트럼프 노믹스 2.0」 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26
4. 시사점	39
【별첨 1】 참고 문헌	44
【별첨 2】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48
【별첨 3】 1930년대 대공황 사례	49
【별첨 4】 세계 평균 관세율 변동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방법	51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제 연 구 실 : 주 원 경제연구실장 (02-2072-6235, juwon@hri.co.kr)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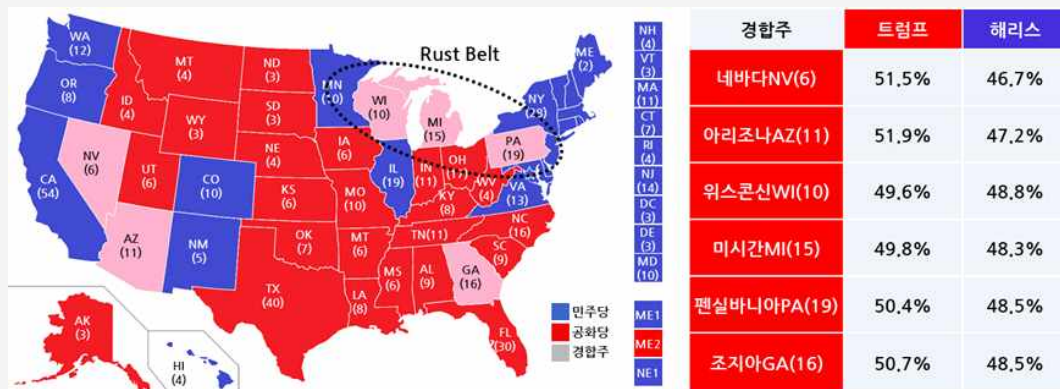
□ 「트럼프 노믹스 2.0」 과 한국 경제

- 2차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의 수출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의회에서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정치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2024년 11월 5일(현지 시각)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또한, 동시에 치러진 미국의 제119대 연방의회 선출 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의 원동력은 미국 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미국 사회 내에 고물가에 따른 실질 소득의 감소 그리고 삶의 질(소비 수준)이 크게 나빠졌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이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경제 상황과 현재를 비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현 바이든 행정부 시기보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가 더 살기 좋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미국의 제47대 주별 대통령 선거 결과 >



자료: U.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CNN, 현대경제연구원.

주: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이며, 결과와 지지율은 한국 시각 11월 7일 07:00 기준.

■ 예상되는 「트럼프 노믹스 2.0」 의 방향

① 「트럼프 노믹스 2.0」 의 경제 철학

「트럼프 노믹스 2.0」의 경제 철학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保護貿易主義)**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고성장을 도모하는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성격과, 성장을 위해서는 다소 환경 이슈를 묵인할 수 있다는 **반환경주의(反環境主義)**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해석되는 ‘미국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경제 철학이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는 ‘미국을 한 번 더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Once Again)’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여기서 위대함의 실체는 경제적 부가가치 측면에서 미국의 우위를 점한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인 수단은 공정하고 상호호혜적 교역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역적자 자체를 불공정한 거래의 결과로 인식하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적극 보호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자유주의는 규제 완화, 감세 등의 전통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수단을 선호하고, 소비자, 노동자보다 기업에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의미한다. 반환경주의는 경제 성장과 상충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이슈에 대해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직접 비용 또는 기회 비용에 부정적 관점을 가진다는 뜻이다.

② 재정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적인 제약상 주된 경기 부양 수단으로 단기적 성과에 효율적인 조세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현재 미국 재정지출 규모의 과도한 팽창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4년으로 국한된다는 현실적 한계로 재정지출의 대규모 확대보다는 감세 정책을 통한 구매력 확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된 경기 부양 수단으로 단기적 성과에 효율적인 감세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세목별로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세율 인하 정책이 핵심이다. 한편, 재정 적자 확대를 막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지출 증가율을 낮게 유지하면서 분야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③ 통화 정책

트럼프 행정부가 FED 연방기금금리의 단기 시나리오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은 금리 인하기에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통화정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중앙은행의 정책적 독립성이 강조되는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중앙은행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라고 보인다. 한편, 과거 트럼프는 자신이 임명한 파월이 FED 의장으로 재임했던 기간에서의 통화정책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차기 의장은 자신의 정책 철학에 부합되는 인사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새로운 의장이 선임되는 2026년 이후 FED의 통화정책에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④ 통상 정책

미국의 무역 적자 개선과 상징적 제조 업종 보호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강화의 통상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에는 관세 인상 직후인 2019년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된 경험이 있다. 그러나 현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1조 달러를 상회하는 등 교역 불균형 구조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트럼프 2기의 통상 정책은 1기의 경우와 같이 품목과 특정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통한 무역 적자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

며, 극단적인 경우 보편 관세율 인상도 예상된다. 우선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를 통해 주요 무역 적자 품목에 대한 쿼터제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슈퍼 301조(Super 301)'를 근거로 교역 대상국 중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의 국가에 대해서 관세율 인상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100%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재차 밝힌 바가 있어 중국에 대한 강경한 통상 정책은 가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트럼프의 최우선 목표가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 중국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한 후에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만약 중국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은 제한된 범위에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무역적자 규모 순위로 2위(무역적자 1,524억 달러)인 멕시코와 3위(무역적자 1,046억 달러)인 베트남에 대해서도 강력한 통상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또한,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10%의 보편적 기본관세 부과를 언급한 바 있는데, 다만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와 '슈퍼 301조(Super 301)'는 특정 품목과 특정 국가에 대한 통상 제한 조치만 가능하다. 따라서 보편 관세율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력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미국의 통상법이 대통령에게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편 관세 인상 공약이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법리 해석 또는 절차상 다양한 장벽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⑤ 공급망 정책

큰 틀에서 외국 기업 유치 전략을 이어가겠지만, 트럼프 1기 전략의 핵심이 인센티브에 있다면, 이번에는 패널티를 통한 투자 유인 확대에 주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트럼프 1기, 조세 감면, 주 정부 단위의 부지나 용수 지원 등을 통한 주요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 미국에 대한 FDI 규모는 4조 6,135억 달러(GDP의 21.6%)로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3조 5,618억 달러(GDP의 18.9%)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이번에도 공화당의 정강이나 선거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면, 전세계 제조업 생산기지를 미국에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진행 중이어서, 외국 자본에 상대적으로 더 특혜를 주는 방안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으로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여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투자 유치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⑥ 에너지·환경 정책

에너지 정책에서는 화석 연료 사용 비중을 높여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 조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1기의 미국 원유 생산량이 크게 높아져 세계 원유 생산에서 미국 원유 생산

비중이 급증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미국 원유 생산이 세계 원유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4%이었으나, 트럼프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18.5%로 급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반대로 미국의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트럼프 1기의 경우 0.8%p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이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그 비중이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다만, 실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규모 자체는 오히려 트럼프 1기에도 크게 증가하였다. 트럼프 1기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낮아졌지만, 실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트럼프 1기 첫해인 2017년 686,583Twh(테라와트시)에서 마지막 해인 2020년에 783,013Twh로 연평균 3.3%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전 오바마 2기 정부의 연평균 증가율 3.9%보다는 낮지만, 현 바이든 정부의 증가율 3.2%와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 연료인 미국 내 오일과 가스 생산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생산 비중을 더 높일 것으로 보이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지원 규모는 축소될 수 있으나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상위 10개 주 중 6개 주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위와 2위가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한 아이오와와 텍사스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 정책에 있어서 비록 트럼프가 재집권했지만 미국 내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의 영향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전략보다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것이 철저히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우회적 전략이 선호될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프로세스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상징적인 의미에서 트럼프 1기(2017년)에 있었던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 이벤트처럼 행정 명령을 통해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재탈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외 이번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가 언급했던 환경 관련 정책으로는 ESG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 친환경자동차 의무 비중 보조금 폐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철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⑦ 산업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정책은 비경제적 가치 판단에 따른 규제 철폐, 상징적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보조금 지원보다 세제 지원 선호 등의 기초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정강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AI, 디지털자산 등에 대해서는 시장 활성화와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프라이버시, 탄소중립, 시장개입 등의 이슈를 차단하고 관련 규제를 철폐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전통 제조업을 대표하는 철강, 자동차 산업의 경우 강한 수입 규제를 통해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의 글로벌 위상과 직결되는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와 민간 기업의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 한편,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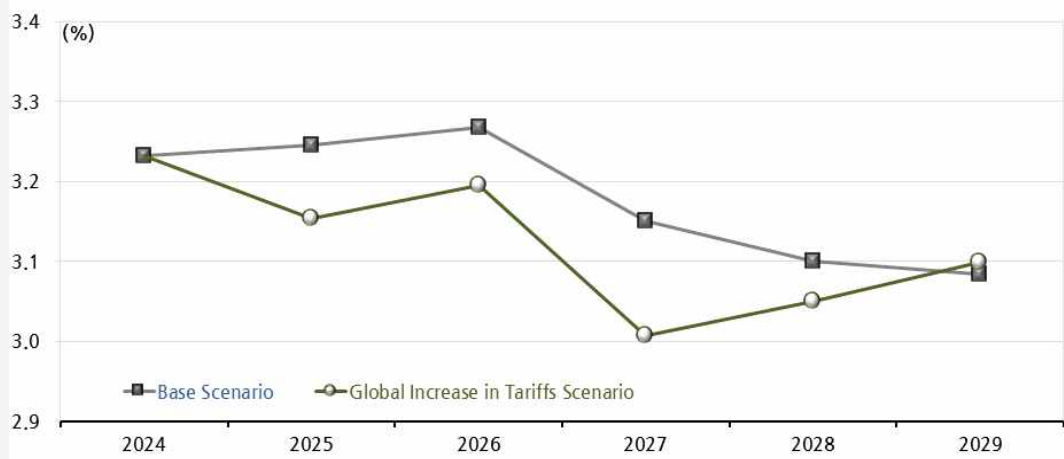
들의 체감 경기에 많은 영향을 주는 **주택 산업**에 대해서는 경기 진작을 위한 인위적인 **부양책**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IRA 및 CHIPS**에 의해 수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 법률의 적용을 막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개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데, 의회의 다수당이 공화당일지라도 당내 일정 부분 동 법률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 법의 개정이나 폐지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한 시행 과정에서 의도적 지연이나 외국 기업의 보조금 지급 자격에 대한 엄격한 적용 등을 통해 법률의 실질적 무효화를 도모할 가능성은 있다.

■ 「트럼프 노믹스 2.0」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① 미국 수입 관세율 인상이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2기에 벌어질 미국의 수입 관세율 인상이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이나, 실제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하는 수준보다 미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IMF는 최근 분석 자료에서 2025년 중반부터 미국, 유로존, 중국 간에 상호 수입 관세가 10%이고 미국의 이외 수입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도 10%가 항구적으로 부과될 때, 2025년 세계 GDP(경제 규모 자체)는 기존 전망 시나리오보다 0.1%p 감소하며, 2026년 0.2%p, 2027년 이후 0.3%p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를 IMF의 기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 시나리오상 3.2%에서 3.1%로 낮아지며, 이후에도 최대 0.14%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IMF의 세계 GDP 대한 기존 시나리오 및 2차 관세 전쟁 시나리오를 이용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계산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자료를 이용한 계산).

② 2차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개요) 2차 관세 전쟁의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세계 평균 관세율 인상을 유발하여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한국의 수출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 고용 감소 압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발생한다.

<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로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시나리오의 구성) 2차 관세 전쟁을 5개의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현대경제연구원 (2018) 추정 결과 및 최근 주요국의 교역 비중을 고려하여 세계 평균 관세율 인상 폭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시나리오 1, 2는 관세 전쟁이 미국과 중국 간에만 발생하는 경우이다. 시나리오 3, 4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과 더불어 미국과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 간 관세 전쟁이 가중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5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미국과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 시나리오별 세계 평균수입 관세율 인상 영향 >

시나리오	내용	평균관세율 인상폭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 	0.7%p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보복관세) 	1.0%p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보복관세) 미국의 세계 나머지 국가 제품 수입 관세율 10% 적용 	1.8%p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보복관세) 미국의 세계 나머지 국가 제품 수입 관세율 10% 적용 세계 나머지 국가의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10%(보복관세) 	2.3%p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보복관세) 미국의 세계 나머지 국가 제품 수입 관세율 10% 적용 세계 나머지 국가의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10%(보복관세) 이외 모든 교역 거래 수입 관세율 10% 적용 	7.5%p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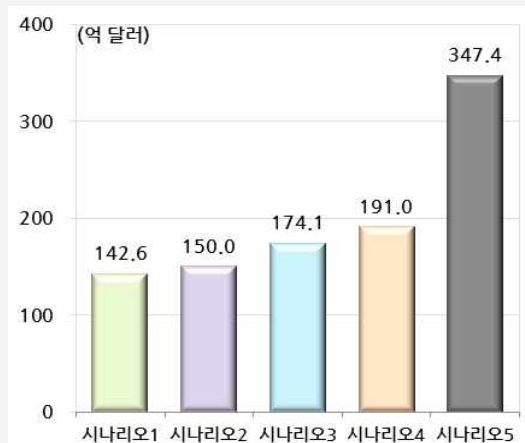
(분석 결과) 첫째, 시나리오에 따른 **세계 교역량 증가율 하락 압력**은 미·중 간 관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세계 교역이 **0.36~0.47% 감소(시나리오 1과 2)**하고,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세계 교역이 **0.85~1.12% 감소(시나리오 3과 4)**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세계 교역은 **3.60% 급락(시나리오 5)**할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한국 수출에 대한 감소 영향은 우선 미·중 간 관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한국 수출은 **142.6~150.0억 달러 감소(시나리오 1과 2)**하고,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174.1~191.0억 달러 감소(시나리오 3과 4)**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도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한국 수출은 **347.4억 달러 감소(시나리오 5)** 압력이 발생한다.

셋째,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감소 영향은 미·중 간 관세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감소(시나리오 1과 2)**하고,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6%p 감소(시나리오 3과 4)** 압력을 받는다. 다음으로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1.1%p 감소(시나리오 5)**하는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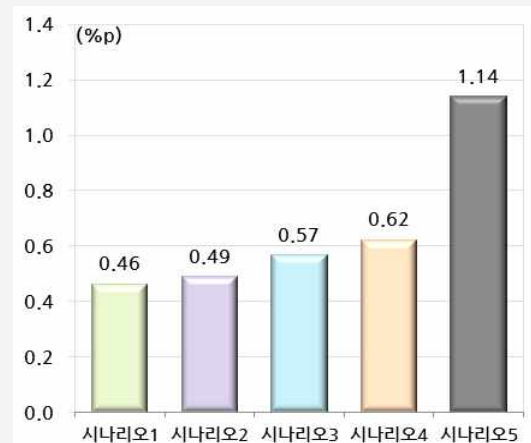
넷째, 한국 취업자수 감소 폭은 미·중 간 관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한국 취업자수 감소 폭은 **약 12만 8,000~13만 5,000명(시나리오 1과 2)**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15만 7,000~17만 2,000명(시나리오 3과 4)**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도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고용 감소 폭은 **31만 3,000명(시나리오 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2차 관세 전쟁의 한국 수출규모 감소 영향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2차 관세 전쟁의 한국 경제성장률 감소 영향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트럼프 노믹스 2.0」의 부상과 이에 따르는 글로벌 경제의 충격과 혼란에 대비하여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국 정부의 핵심 전략인 수입 관세 인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둘째, 당연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 가능성에 대응하여 민·관의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 통상 당국과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접근 시 현지에서 「트럼프 노믹스 2.0」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자제하고, 한국 경제의 발전이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피력해야 한다. 넷째, 트럼프 1기와 달리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 이외의 대규모 무역 적자국에 대한 통상 갈등이 '2차 관세 전쟁'의 주된 이슈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섯째, 글로벌 교역 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미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그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 여섯째, 「트럼프 노믹스 2.0」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수출 경기의 회복력이 약화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한국 경제가 수출 경기에 상당 부분 성장을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상 환경의 악화에 따른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의 자체적 펀더멘틀의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노믹스 2.0」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버리고, 그 근간에 미국 사회가 중요시하는 아젠다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전략적인 대응이 따라준다면 이번 미국의 정권 교체가 한국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요구된다.

1.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 트럼프 재선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의회에서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미국 정치 지형이 급변

- 2024년 11월 5일(현지 시각)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대통령에 당선

-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에 승리함으로써, 제45대 대통령(임기 2017년 1월 20일 ~ 2021년 1월 19일)으로 재임한 바 있음
- 이후 제46대 대통령(임기 2021년 1월 20일 ~ 2025년 1월 19일) 선거에서 조 바이든(Joe Biden)에게 패배함
- 이번 11월 5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에게 승리함으로써, 제47대 대통령(임기 2025년 1월 20일 ~ 2029년 1월 19일)으로 당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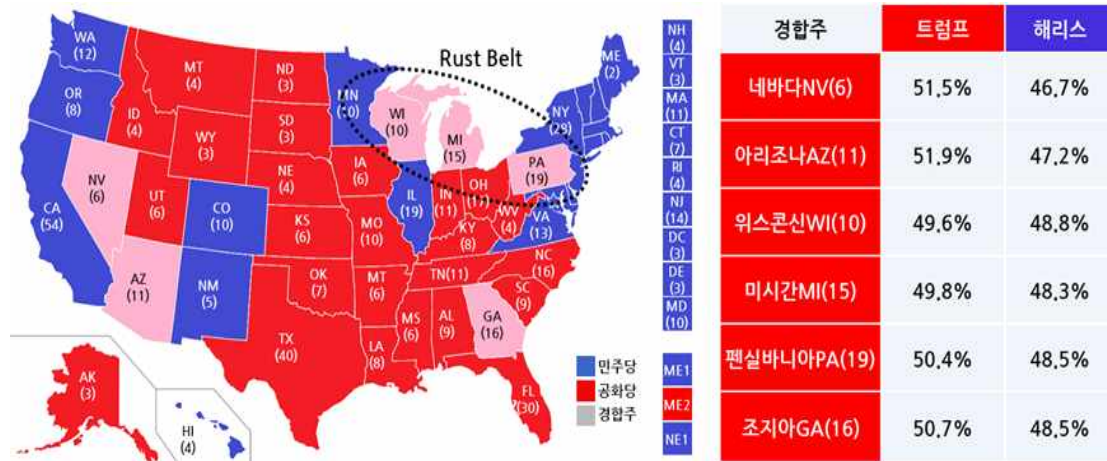
- 미국의 대통령 선거 선거 제도(간선제)¹⁾에 상에서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많은 선거인단 수를 확보²⁾

- 현재 최종 결과가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가 전체 선거인단 수 538명 중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으로 확실시 됨
- 이후 형식적인 절차로 주별 선출된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거(Electoral College Vote)가 12월 16일(현지 시각)에 있을 예정이나, 선거인단 수 격차가 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 확실시 됨

1)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승자독식(Winner-Take-All) 방식 또는 비례대표(Proportional Representation) 방식을 결정하여 각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함. 이번 치러진 선거는 각 주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하기 위한 일반 선거(Popular Vote)로, 주별 선거인단 수는 인구 비례에 근거하여 책정됨. 대부분의 주에서는 승자독식(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가 모든 선거인단 수를 가짐) 방법을 사용함.

2) 현재 시점의 미국의 주별 개표 현황과 미국 유력 언론사들의 보도를 근거로 작성.

< 미국의 제47대 주별 대통령 선거 결과 >



자료: U.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CNN, 현대경제연구원.

주: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이며, 결과와 지지율은 한국 시각 11월 7일 07:00 기준.

- 또한, 동시에 치러진 미국의 제119대 연방의회 선출 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증대
 - 최종 결과가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상원은 선거 이전 공화당(전체 100석 중 50석)이 다수당이었으며, 이번 선거에도 공화당이 다수당(5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220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짐
- 현재 결과대로 행정부와 상·하원 의회를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는 상황으로 2016년 선거의 결과와 유사

○ 트럼프의 대선 승리의 원인

- 이번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원동력은 미국 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실제 미국 경제 상황은 경제 성장과 고용 시장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임
 - 그러나, 미국 내에서 그러한 상대성을 인식하기는 어려우며, 여전히 고물가

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삶의 질(소비 수준)이 크게 나빠졌다는 불만이 팽배함

- 이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경제 상황과 현재를 비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현 바이든 행정부 시기보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가 더 살기 좋았다는 인식이 확산됨
-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기후변화·환경, 낙태 등의 사회 이슈보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경제 이슈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수행에 부정적인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The Economist/YouGov의 바이든 행정부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조사 결과 >

항 목	긍정 (Approve)	부정 (Disapprove)	무응답 (No opinion)
전반적인 국정운영 (Way)	41%	53%	6%
일자리와 경제 (Jobs / the economy)	43%	48%	10%
재정정책 (Taxes / government spending)	38%	50%	11%
인플레이션 (Inflation / prices)	35%	54%	11%
기후변화 · 환경 (Climate change / the environment)	42%	41%	17%
낙태 (Abortion)	40%	42%	18%
범죄 (Crime)	38%	49%	14%

자료: The Economist/YouGov Poll.

주: 1) Interviewing Dates - September 29 ~ October 1, 2024

2) U.S. Citizens, age 18 and over, 1638 LV.

2. 예상되는 「트럼프 노믹스 2.0」의 방향

(1) 트럼프 행정부 1기와 2기의 미국 내 여건 비교

○ 경제적 여건

- (경기) 지난 트럼프 1기 집권 초반 미국 경제의 경기 국면은 저점에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국면에 위치
 - 오바마 2기 마지막 해(2016년 대선이 있던 해)인 2016년의 미국 경제성장률은 1.8%로 2015년의 2.9%보다 1.1%p가 하락함
 - 이는 당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원자재 및 유가 하락에 따른 신흥국 경기 부진,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등으로 세계 경제 전반이 위축되면서 미국 경제의 내수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임³⁾
 - 이후 트럼프 1기 첫해인 201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5%로 반등하였으며, 2018년에는 3.0%의 호황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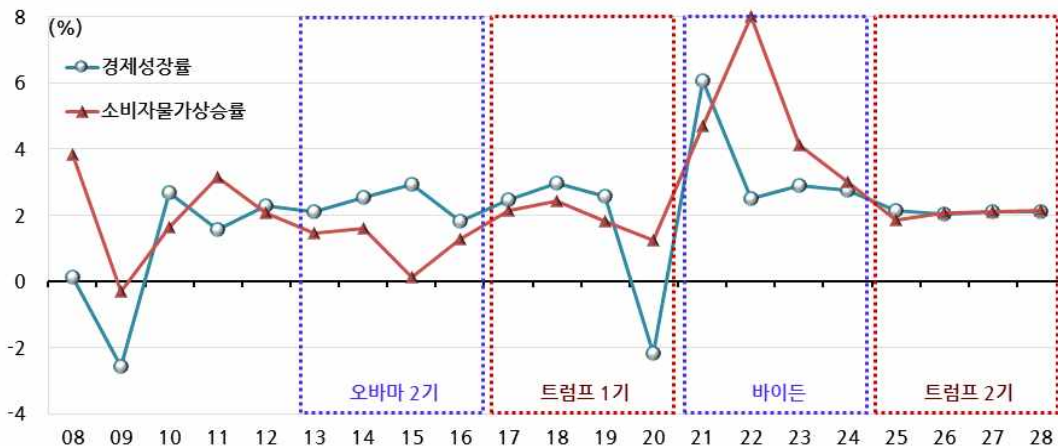
- 이번 트럼프 2기 집권 초반의 미국 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
 - 현재 미국 경제에 뚜렷한 경기 하강 신호는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컨퍼런스보드의 경기선행지수가 오래전부터 하락하면서 미국 경제의 경기 하강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2.9% 그리고 2024년에도 2.8%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IMF에 따르면 2025년 2.2%, 2026년 2.0%로 향후 성장률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에 있어 경기 하강의 강도에 따라 무착륙, 연착륙, 경착륙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지만,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라는 방향성에 대하여 시장에 큰 이론(異論)은 없는 상황임

3) 미국 국민계정상 개인소비지출(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증가율은 2015년 6.2%에서 2016년 2.5%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총민간투자(Gross private domestic investment) 증가율도 같은 기간 6.2%에서 -0.1%의 감소세로 전환됨.

- (인플레이션) 트럼프 1기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높아졌으나,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평가
 - 트럼프 1기 초반인 2017년과 2018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2.1% 및 2.4%로 2016년의 1.3%보다 높아지는 모습을 보임
 - 다만,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면서 경제 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평가됨

- 나아가 이번 트럼프 2기 초반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아지는 추세이며 향후에도 2% 내외의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급등한 물가 수준 자체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IMF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첫해인 2025년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로 2024년의 3.0%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물가 불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영향을 주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행정부별 물가상승률을 보면, 오바마 2기(2013년 1월 ~ 2017년 1월)는 전체 기간 누적 5.5%, 트럼프 1기(2017년 1월 ~ 2021년 1월)는 7.7%를 기록함
 -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임기(2021년 1월 ~ 현재) 중 소비자물가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팽창적 통화정책, 이어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요인으로 약 20.5%가 급등해 있는 상황임

< 미국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연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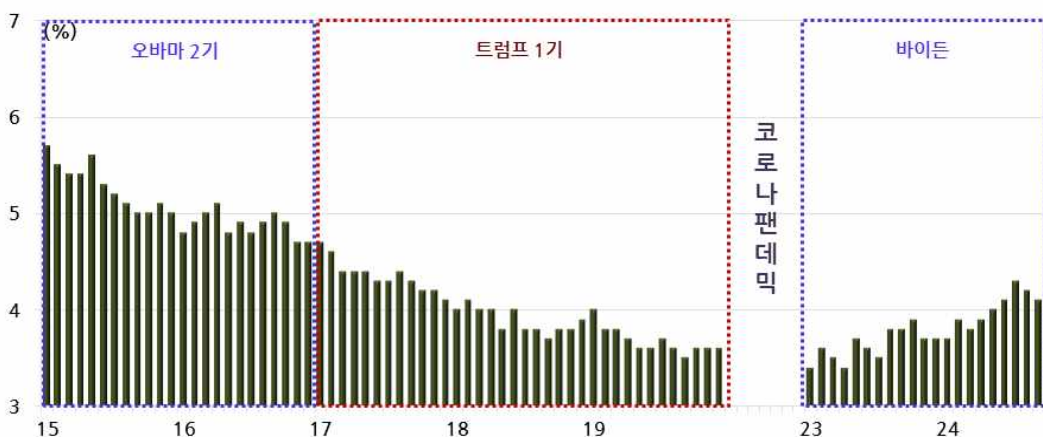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BEA, BLS, IMF 통계를 이용한 작성).

- (고용) 트럼프 1기의 고용 시장은 이전부터의 실업률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양호한 모습을 시현
 - 미국 실업률은 오바마 2기 후반 대선이 있었던 2016년 11월과 12월에는 각각 4.9% 및 4.7%를 기록함
 - 이후 트럼프 1기가 시작된 2017년의 월간 실업률은 1월 4.7%이며, 같은 해 12월 4.1%까지 낮아졌고 이후에도 고용 시장 호황이 지속되면서 2019년 9월에는 완전 고용 수준이라 평가되는 3.5%까지 낮아짐
 - 연간 실업률은 오바마 2기였던 2015년 5.3%에서 2016년에 4.9%, 2017년에는 4.4%, 2018년 3.9%, 2019년 3.7%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짐

- 그러나 이번 트럼프 2기 초반의 고용 시장은 이전부터의 실업률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현안이 고용 시장 냉각을 방지하는 데에 있을 것으로 예상
 - 미국 실업률은 2023년 초 완전고용 국면(HRI 추정 자연실업률 3.5% 내외)에 도달한 이후 상승 추세를 지속 중임
 - 향후에도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고용시장이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미국 실업률(월간, Seasonally Adjusted)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BLS 통계를 이용한 작성).

주: 가독성을 위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실업률은 그림에서 제외.

○ 정치적 여건

- (연임 가능 여부) 연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임을 염두에 둔 정책적 제약 정도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집권 1기의 경우 재선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 수단의 선정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이번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연임이 불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정책적 자유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년 후인 2026년 11월에 치러질 중간 선거⁴⁾에서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취임 초반에는 지지율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생각됨

- (지지율) 이번 대선의 전국 단위 지지율은 50%를 상회하거나 50% 내외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지난 2016년의 지지율(46.1%)보다 높아진 상황
 -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나설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의회 정치 지형)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철학을 구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이론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가 가능한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트럼프의 입장이 공화당의 견해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공화당 내에서도 다양한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모든 법률에 대한 개정이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사회적 여건

- 유럽 정치 지형의 보수화 등 주요국에서 보수 세력 지지율이 증가하는 상황과 유사하게 미국 사회 내에서도 진보적 사회 이슈의 중요도가 하락
 -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의 환경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코로나

4) 하원 전체 435석, 상원 100석 중 33석, 39개의 주 및 준주 주지사 선거 등.

팬데믹 이후로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경제적 이슈가 크게 부상하면서 트럼프 1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론의 지지 정도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 다만, 낙태 이슈에 대해서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해 헌법적 보장이 아닌 주별 선택을 결정하면서, 다시 낙태권 보장에 대한 여론 강도는 높아지는 상황임
- 트럼프 1기 미국-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한 바 있으나,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 이민 문제의 경우 정당을 떠나 미국 내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인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 트럼프 행정부 1기와 2기의 미국 내 경제·정치·사회 여건 비교 >

구 분		트럼프 행정부 1기 (2017~2020년)	트럼프 행정부 2기 (2025~2028년)
경제	경기	집권 초반 경기 회복기	집권 초반 경기 하강기
	고용	고용 시장 호황	고용 시장 냉각 우려
	인플레이션	집권 초반 인플레이션 압력 다소 확대	집권 초반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정치	연임 가능 여부	연임 가능	연임 불가
	지지율 (대선 득표율)	공화당 < 민주당	공화당 > 민주당
	의회 다수당	하원 - 공화당 상원 - 공화당	하원 - 공화당(예상) 상원 - 공화당(예상)
사회	환경	갤럽 여론조사, 기후변화가 매우 우려된다 비율, 2017년 45%	갤럽 여론조사, 기후변화가 매우 우려된다 비율, 2023년 39%
	낙태	트럼프는 공약으로 낙태권 폐지를 주장	2022년 대법원 낙태권에 대한 헌법적 보호 폐지 이후 이슈화가 되면서 낙태권 보장 여론 강화
	불법 이민	불법 이민에 대해서 부정적	여전히 부정적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 예상되는 「트럼프 노믹스 2.0」의 정책 방향

① 「트럼프 노믹스 2.0」의 경제 철학

○ 「트럼프 노믹스 2.0」의 경제 철학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保護貿易主義)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고성장을 도모하는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성격과 성장을 위해서는 다소 환경 이슈를 묵인할 수 있다는 반환경주의(反環境主義)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

- (보호무역주의)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해석되는 '미국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경제 철학

- 트럼프는 2016년 선거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2020년 선거에서는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라는 슬로건을 표방한 바 있음
- 이번 선거에서는 '미국을 한 번 더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Once Again)'라는 슬로건을 내세움
- 위대함의 실체는 경제적 부가가치 측면에서 미국의 우위를 점한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인 수단은 공정하고 상호호혜적 교역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역적자 자체를 불공정한 거래의 결과로 인식하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적극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짐

-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 감세 등의 전통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수단을 선호하고 있으며, 소비자, 노동자보다 기업에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가질 것으로 판단

- 선성장-후분배의 전통적인 신자유주의적 태도가 보이며, 소비자 후생이나 노조 지위 향상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에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유시장경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케인즈주의에서와 같은 재정지출의 역할보다는 감세를 통한 민간 부문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선호될 것으로 예상됨
 - 공화당 정강(2024 GOP PLATFORM)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감세 정책의 주된 수단은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이 될 것이기에, 소득 불평등이 악화될 것이나 이를 보완할 뚜렷한 복지 정책은 찾기 어려움
- (반환경주의) 경제 성장과 상충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이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
- 「트럼프 노믹스 2.0」의 최우선 목표가 미국의 경제적 가치 확대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직접 비용 또는 기회 비용에 부정적 관점을 가짐
 - 또한 고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보다 단가가 낮은 대신 탄소 배출이 많은 화석에너지를 절대적으로 선호함

< 2024 미국 공화당 정강(2024 GOP PLATFORM) 제3장의 주요 내용 >

제3장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건설 (BUILD THE GREATEST ECONOMY IN HISTORY)	
1. 규제 완화 (Cut Regulations)	일자리, 자유, 혁신을 억압하는 규제를 축소, 규칙 제정에 투명성과 상식을 구현
2. 트럼프 감세 영구화 (Make Trump Tax Cuts Permanent and No Tax on Tips)	표준 공제를 두 배로 늘리고 아동 세금 공제를 확대하며 모든 미국인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트럼프 감세 및 일자리법의 조항을 영구화 수백만 명의 레스토랑 및 숙박업 종사자를 위해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고 추가 세금 감면을 추진
3. 공정하고 상호호혜적 무역 (Fair and Reciprocal Trade Deals)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계속 수립하여 미국 생산자를 우선시하고 중요한 공급망을 국내로 전환
4. 신뢰가능하면서 풍부한 저비용 에너지 (Reliable and Abundant Low Cost Energy)	전반적으로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에 대한 시장 왜곡적인 제한을 완화하여, 미국 에너지를 독립시킨 다음 에너지를 지배
5. 챔피언 혁신 (Champion Innovation)	글로벌 신산업을 선도함으로써 미래 미국 경제의 위대함을 위한 토대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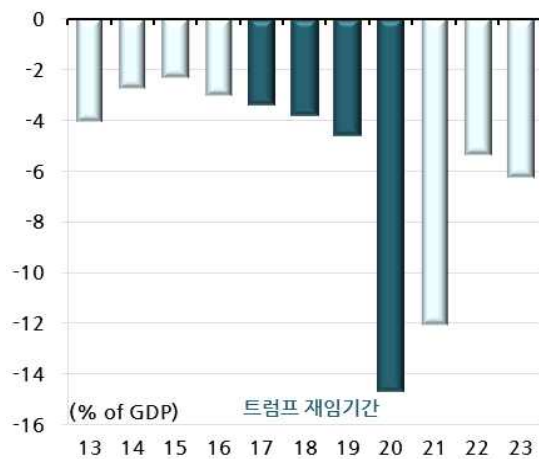
자료: 2024 GOP PLATFORM.

② 재정 정책

- (재정-조세 정책 기초)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적인 제약상 주된 경기 부양 수단으로 단기적 성과에 효율적인 조세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현재 미국 재정지출 규모의 과도한 팽창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4년으로 국한된다는 현실적 한계로 재정지출의 대규모 확대보다는 감세 정책을 통한 구매력 확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팽창을 통한 총수요 확대 정책(케인즈)에서 감세 정책을 통한 총공급 확대 정책(래퍼, 펠드스타인)으로 경기 조절 수단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특히 재정지출은 특정 분야에 수혜가 국한되고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한계가 있어, 수혜의 대상이 보편적이고 단기적인 경기 진작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임기가 마지막인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또한, 재정지출의 팽창은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금리가 상승할 우려가 있어, 물가 안정과 저금리를 선호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초와 배치될 수 있음
 - 주된 경기 부양 수단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효율적인 감세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세목별로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세율 인하 정책이 핵심
 - 지난 트럼프 1기,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에 「감세 및 고용법(TCJA, Tax Cuts and Jobs Act)」을 시행하여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하향 조정함
 - 또한 동 법에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춘 바 있음
 - 「TCJA」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인데, 트럼프는 이에 대해 동 법의 시한을 연장하고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현 21%에서 15%로 추가 인하할 것으로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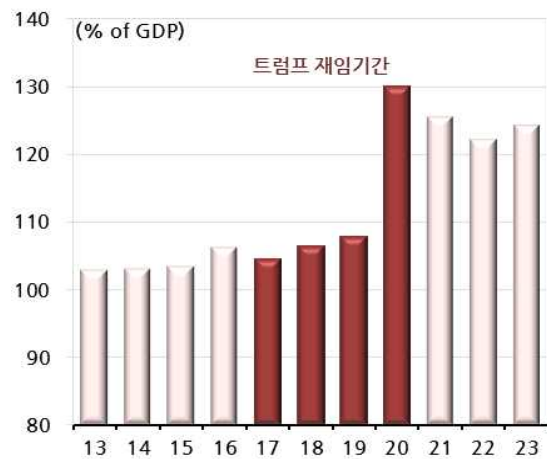
- 한편, 재정 적자 확대를 막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지출 증가율을 낮게 유지하면서 분야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
 - 트럼프 1기 당시, 2020년을 제외하여도, 2017~2019년의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는 추세를 가지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2기에도 재정건전성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 더구나, 미국의 재정수지적자/GDP 비중은 통상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3%를 크게 넘어 6%대를 기록하고, 정부부채/GDP 비율도 120%를 상회하면서 재정 여력이 이례적으로 취약한 상황임⁵⁾
 - 또한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감세정책과 더불어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할 경우,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전체 재정지출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잡을 것이나, 증가율 자체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지출 항목별로는 사회보장, 메디케어, 국방비 등의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⁶⁾
 - 또한, 트럼프 1기 때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정지출 등과 같은 인기영합적인 새로운 지출 항목을 만들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미국 재정수지/GDP 비율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미 백악관 예산관리국 통계를 이용한 작성).

< 미국 정부부채/GDP 비율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미 재무부 및 IMF 통계를 이용한 작성).

5) EU는 SGP(Stability and Growth Pact, 안정·성장 협약) 상에서 회원국들이 재정적자/GDP 비율이 3%, 부채/GDP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말 것을 권고함.

6) 공화당 정강에서 낭비적인 연방 정부 지출을 억제할 것이라 밝히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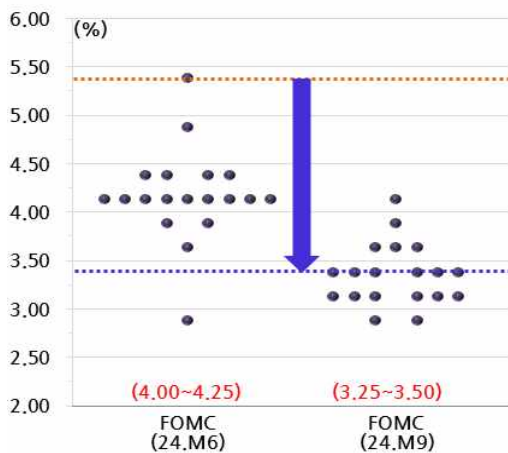
③ 통화 정책

○ (금리 정책 기조) 트럼프 행정부가 FED 연방기금금리 단기 시나리오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

- 현재 미국은 금리 인하기에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통화정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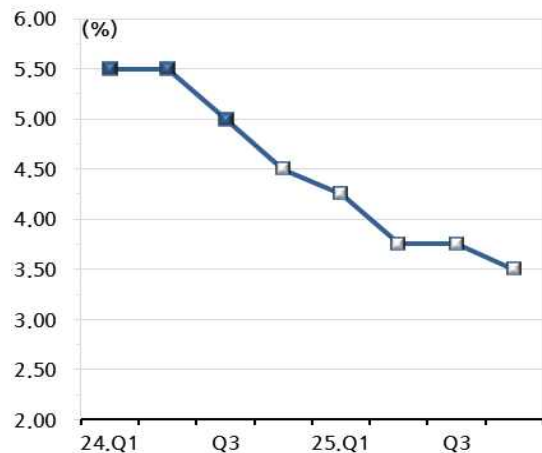
- FED-FOMC는 '23년 7월 ~ '24년 7월까지 연방기금금리를 5.50%(상한)로 동결한 바 있으나, '24년 9월 FOMC에서 빅컷(Big cut)을 통한 피벗(pivot, 통화정책 방향의 전환점)을 통해 금리 인하 국면으로 진입함
- FED-FOMC 자료에 근거할 경우, 2025년 말 3.5%까지 연방기금금리(정책금리) 인하가 예상되며, 또한, 시장에서도 비슷한 추세로 예측하고 있고 일부 낙관적인 부류는 3% 내외까지도 전망함
- 이미 FED의 통화정책 기조가 금리 인하 국면으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만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무엇보다도 중앙은행의 정책적 독립성이 강조되는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앙은행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임

< FOMC 점도표 상 2025년말 FED 정책금리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FED 통계를 이용한 작성).

< 시장 예측 FED 정책금리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Bloomberg 통계를 이용한 작성).

- 한편, 과거 트럼프는 자신이 임명한 파월이 FED 의장으로 재임했던 기간에서의 통화정책에 상당한 비판을 제기했기 때문에 차기 의장은 자신의 정책 철학에 부합되는 인사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새로운 의장이 선임되는 2026년 이후 FED의 통화정책에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트럼프 1기 초반의 FED 통화정책은 이전 오바마 정부에서 임명된 재닛 옐런(Janet Louise Yellen)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되었으며, 이에 트럼프는 2018년 2월 제롬 파월(Jerome Hayden Powell)로 의장을 교체함
 - 그러나 제롬 파월의 경우 이전 재닛 옐런의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받아,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연방기금금리를 1%p 인상하였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는 상당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음
 - 이후 2019년 7월, 9월, 10월 세 번에 걸친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에 부합되는 방향을 유지함⁷⁾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차기 FED 의장으로 케빈 워시(Kevin Warsh) 전 연준 이사('06~'11), 케빈 하셋(Kevin Hassett)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17~'19), 아서 래퍼(Arthur B. Laffer) 등이 거론됨⁸⁾
 - 한편,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현 의장인 제롬 파월(Jerome Powell)이 재선임될 수 있고, 현 FED 이사들 중 명망이 높고 매파가 아닌 크리스토퍼 월러(Christopher J. Waller)와 같은 인사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FED 정책금리(연방기금금리)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FED 통계를 이용한 작성).

7) 2020년 3월 3일과 15일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 팬데믹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의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8) Restuccia, Andrew and Leary, Alex(2024) 참조.

④ 통상 정책

○ (통상 정책 기조) 미국의 무역 적자 개선과 상징적 제조 업종 보호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강화의 통상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1기의 기간 중 관세 장벽을 강화하면서 2019년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된 경험이 존재

- 트럼프 1기 첫해인 2017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7,962억 달러이었으며, 다음 해인 2018년에는 8,787억 달러로 증가함
- 관세 인상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9년의 경우 8,532억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교역 구조의 혼란으로 적자 규모가 다시 9,052억 달러로 증가함

- 그러나 현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1조 달러를 상회하는 등 교역 불균형 구조가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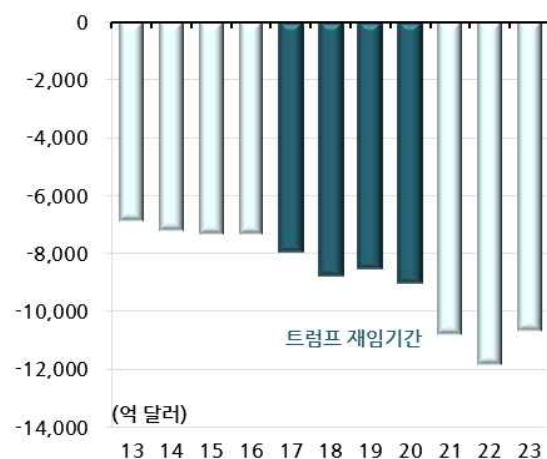
- 2023년 기준 미국의 총수입 규모는 3조 841억 달러이며 총수출 규모는 2조 192억 달러에 그쳐,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조 650억 달러에 달함
- 2024년에도 1~8월까지의 수출과 수입 규모로 추정해 보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조 1,00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총 수출입 규모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미 상무부 통계를 이용한 작성).

< 미국의 무역수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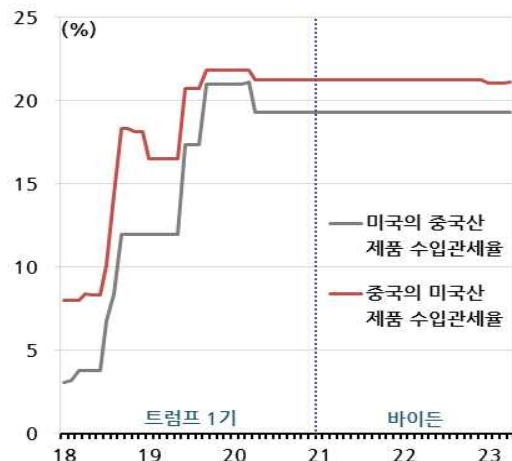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미 상무부 통계를 이용한 작성).

- 트럼프 1기의 미국 정부는 우선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근거하여 미국 철강 산업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추진
 -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및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 가드 조치를 공표한 뒤, 주요국과의 협상을 통해 차별적으로 추가 관세를 면제함
 - 당시 한국은 신속하게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쿼터제로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관세를 면제받은 바 있음
 - 그러나, EU는 이에 대해 보복관세로 맞대응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야 미국은 EU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은 유지하면서 대신 관세할당제도(TRQ)를 통해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EU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함
- 다음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무역 수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하여 '슈퍼 301조(Super 301)'에 근거하여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수입 관세율을 인상한 바 있음
 - 미국 정부는 2018년 7월 중국산 제품 약 340억 달러 규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작으로 2019년 9월까지 중국 수입의 약 66.4%에 해당되는 품목에 관세를 인상함
 - 이에 따라 미중 관세 전쟁 이전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3.1%에서 현재 19.3%에 달함

< 트럼프 1기 미-중 관세 인상 조치 > < PIIE의 미국 대중 수입 관세율 추이 >

일자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조치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조치
'18. 07. 06	① 340억불 25%	① 340억불 25%
'18. 08. 23	② 160억불 25%	② 160억불 25%
'18. 09. 24	③ 2,000억불 10%	③ 600억불 5~10%
'19. 05. 10	③ 2,000억불 25%	—
'19. 06. 01	—	③ 600억불 5~25%
'19. 09. 01	④ 1,120억불 15%	④ 750억불 일부 5~10%

자료: 현대경제연구원(미 상무부 통계를 이용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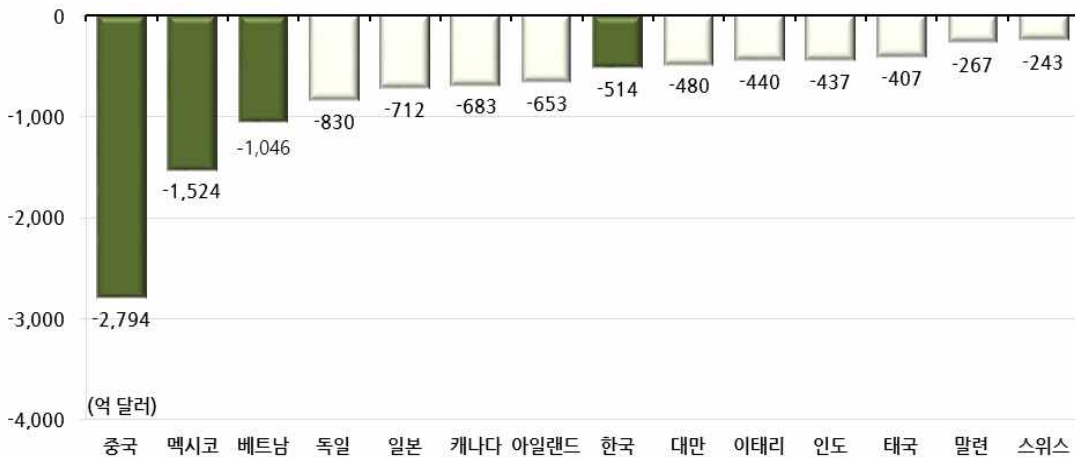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PIIE 통계를 이용한 작성).

- 트럼프 2기의 통상 정책도 1기의 경우와 같이 품목과 특정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통한 무역 적자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극단적인 경우 보편 관세율 인상도 예상
- (품목 관세 인상) 우선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를 통해 주요 무역 적자 품목에 대한 쿼터제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
 - 현재, EU산 철강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중단되어 있으나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은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1기 때 한국과 일본이 협상을 통해 추가 관세 부과에서 제외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요 대상국들에 대해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존재함
 - 철강, 알루미늄 이외에도 주요 적자 품목인 IT 소비재, 가전, 자동차 등에 추가적인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주요 무역 적자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다음으로 ‘슈퍼 301조(Super 301)’를 근거로 교역 대상국 중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의 국가에 대해서 관세율 인상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존재
 - 최근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100%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재차 밝힌 바가 있음
 - 이는 중국이 여전히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국(2023년 기준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는 2,794억 달러로 미국 무역적자의 26.2%)이기 때문에 공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무역적자 규모 순위로 2위(무역적자 1,524억 달러)인 멕시코에 대해서도 관세율 인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함⁹⁾
 - 이는 과거와 같은 불법 이민 문제에서의 양국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생산 비용이 저렴하면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용이한 멕시코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기 때문임

9)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멕시코와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자 「국제비상경제수권법」 상 대통령에게 위임된 포괄적 권한으로 멕시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멕시코와 일정 부분 협상이 진전되면서 이를 취소한 바 있음.

- 한편, 무역적자 규모 순위로 3위(무역적자 1,046억 달러)인 베트남에 대해서도 통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기존 중국에서의 생산 이점이 사라지는 것에 대응하여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차이나+1' 전략의 일환으로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베트남과의 대규모 무역적자는 베트남이 미·중 간 관세 전쟁을 우회할 수 있는 통로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함

<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별 무역수지(2023년)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미 상무부 통계를 이용한 작성).

- (보편 관세 인상)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10%의 보편적 기본관세 부과를 언급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¹⁰⁾
 -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근거하여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상 조치 등이 가능하며, ‘슈퍼 301조(Super 301)’에 근거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통상 제한 조치가 가능함
 - 즉, 미국의 통상 정책 변경은 특정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트럼프의 보편 관세 인상은 현재 근거할 법률이 없는 상황임
 - 다만, 일부에서는 「비상경제수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이나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을 보편 관세 인상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미국 경제가 큰 위기에

10) Riley(2023), Wolff(2024), Antoine et al(202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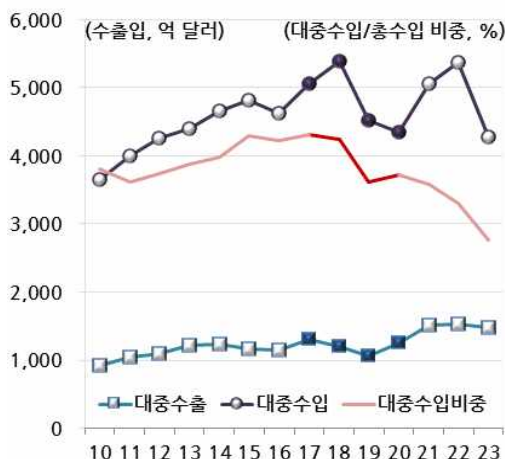
빠지거나 적대적인 국가에 대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됨

- 따라서 미국의 통상법이 대통령에게 상당한 수준의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편 관세 인상 공약이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법리 해석 또는 절차상 다양한 장벽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움

- (대 중국 통상 정책 기조)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이며, 대 중국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한 후에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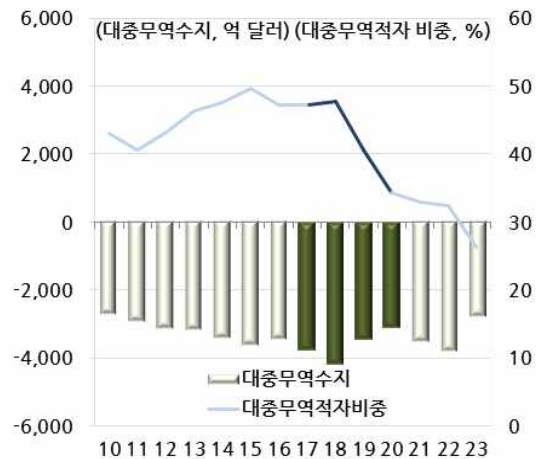
- 트럼프 1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일련의 관세 인상 조치가 종결된 효과가 나타난 2019년의 경우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비율은 18.1%로 2018년의 21.2%보다 축소되었으며, 같은 기간 대 중국 무역적자는 4,192억 달러에서 3,456억 달러로 감소함
- 이후 2020년 1월에 미국은 중국과의 합의를 통해 1,12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 15% 관세율에서 7.5% 관세율로 인하하고, 중국은 향후 2년간 미국산 제품(원자재) 2,000억 달러 규모를 구매하면서 일부 제품의 관세를 하향조정할 바 있음
- 이번에도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협상을 통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를 요구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미 상무부 통계를 이용한 작성).

<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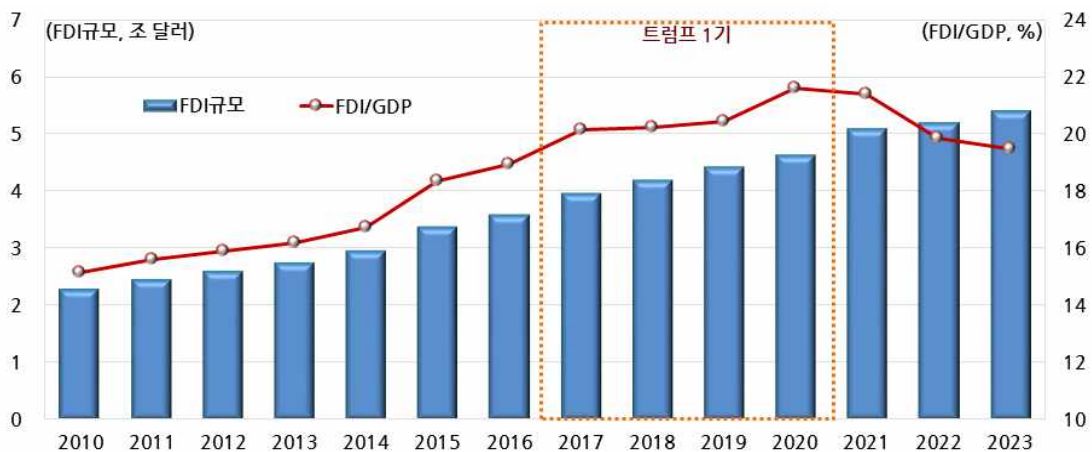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미 상무부 통계를 이용한 작성).

⑤ 공급망 정책

- (투자) 큰 틀에서 외국 기업 유치 전략을 이어가겠지만, 트럼프 1기 전략의 핵심이 인센티브에 있다면, 이번에는 패널티를 통한 투자 유인 확대에 주력할 가능성이 존재
 - 트럼프 1기, 조세 감면, 주 정부 단위의 부지나 용수 지원 등을 통한 주요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인
 - 트럼프 1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함
 - 이에 따라 트럼프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 미국에 대한 FDI 규모는 4조 6,135억 달러(GDP의 21.6%)로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3조 5,618억 달러(GDP의 18.9%)보다 크게 증가함
 - 이번에는 수입 관세 인상을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간접적 투자 유치 전략에 주력할 것으로 판단
 - 공화당의 정강이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면, 전세계 제조업 생산기지를 미국에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강조함
 - 그러나 이미 많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진행 중이어서, 외국 자본에 상대적으로 더 특혜를 주는 방안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미국으로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여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투자 유치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미국의 Inflow FDI 및 대 GDP 비율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USTR 및 BEA 통계를 이용한 작성).
 주: Position in the United States on a Historical-Cost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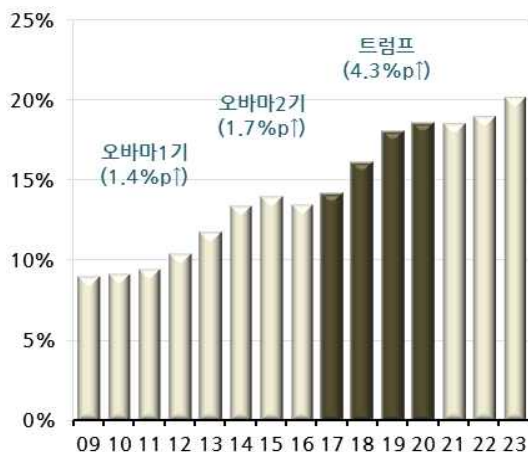
⑥ 에너지·환경 정책

○ (에너지) 화석 연료 사용 비중을 높여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 조치는 없을 것으로 전망

- 트럼프 1기의 미국 원유 생산량이 크게 높아져 세계 원유 생산에서 미국 원유 생산 비중이 급증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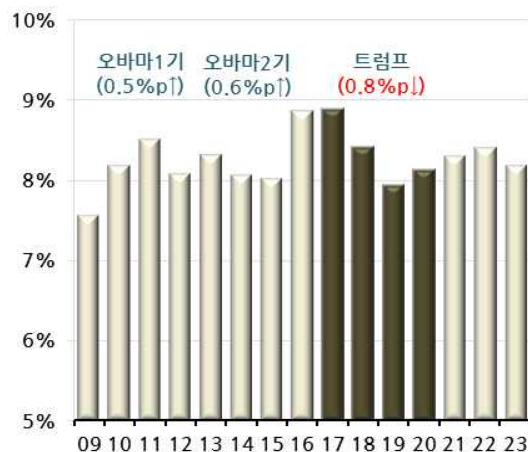
-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미국 원유 생산이 세계 원유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4%이었으나, 트럼프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18.5%로 급증함
- 물론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였지만, 트럼프 1기에 생산 비중 증가 폭은 4.3%p로 오바마 1기(1.4%p)와 오바마 2기(1.7%p)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함
- 이에 따라 미국의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트럼프 1기의 경우 0.8%p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이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그 비중이 증가한 것과 대조됨

< 미국 원유 생산의 대 세계 생산 비중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BP 통계를 이용한 작성).

< 미국 신재생에너지/1차에너지 비중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EIA 통계를 이용한 작성).

- 단, 실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규모 자체는 오히려 트럼프 1기에도 크게 증가
 - 트럼프 1기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낮아졌지만, 실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트럼프 1기 첫해인 2017년 686,583Twh(테라와트시)에서 마지막 해인 2020년에 783,013Twh로 연평균 3.3%가 증가함
 - 이는 이전 오바마 2기 정부의 연평균 증가율 3.9%보다는 낮지만, 현 바이든 정부의 증가율 3.2%와 비슷한 수준임

< 미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EIA 통계를 이용한 작성).

- 이번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 연료인 미국 내 오일과 가스 생산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생산 비중을 더 높일 것으로 보이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지원 규모는 축소될 수 있으나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이번 공화당 정강에 명시되어 있듯이 에너지 분야에 대한 트럼프 노믹스의 핵심 목표는 미국이 그린 뉴딜(탄소 중립)에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국이 되는 것에 있음
 - 따라서, 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은 생산 비용이 낮은 화석 연료와 원자력 에너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화석 연료 생산·발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 인프라 투자 계획에 제동이 걸리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2022년 기준으로 화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상위 10개 주의 이번 대선에서의 정당 지지 구도는 화석에너지 부문은 공화당을

- 지지했던 주가 8개, 원자력에너지 부문은 9개에 달함
- 따라서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고려할 때,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유인이 높음
- 다만,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경우에도 발전량 상위 10개 주 중 6개 주가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고 특히 발전량 1위와 2위가 아이오와와 텍사스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보다는 바이든 정부의 금융·세계 지원 규모를 삭감 또는 폐지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에너지원별 상위 10개 주 발전량(2022년) >

(단위: 조 BTU)

순위	화석에너지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지역	발전량	지역	발전량	지역	발전량
	미국 전체	82,082.4	미국 전체	8,046.4	미국 전체	8,307.3
1	텍사스	24,053.5	일리노이	1,031.1	아이오와	771.0
2	펜실바니아	9,001.1	펜실바니아	794.3	텍사스	654.9
3	뉴멕시코	6,416.6	사우스캐롤라이나	567.0	캘리포니아	543.2
4	와이오밍	5,952.8	노스캐롤라이나	444.7	워싱턴	419.0
5	웨스트버지니아	5,739.4	알라바마	441.3	일리노이	333.7
6	루이지애나	4,394.5	텍사스	433.9	네브라스카	327.3
7	오클라호마	4,098.2	테네시	371.6	미네소타	307.8
8	노스다코타	3,951.2	조지아	355.4	조지아	273.7
9	콜로라도	3,429.4	아리조나	333.1	인디애나	251.5
10	오하이오	2,648.8	플로리다	320.9	플로리다	234.4

자료: 현대경제연구원(EIA 통계를 이용한 작성).

주: 지역(주)의 색깔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현 시간 개표 진행중 우위)한 정당으로 공화당은 적색, 민주당은 청색으로 구분.

- (환경) 비록 트럼프가 재집권했지만 미국 내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의 영향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전략보다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것이 철저히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우회적 전략이 선호될 것으로 판단
- 탄소중립 이슈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탄소중립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전략을 선호
 - 그린뉴딜을 비판하지만, 실제로 트럼프 1기 당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감소한 것은 아님

-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프로세스를 가질 것으로 전망
 - 우선 상징적인 의미에서 트럼프 1기(2017년)에 있었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¹¹⁾ 이벤트처럼 행정 명령을 통해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재탈퇴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이외 이번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가 언급했던 환경 관련 정책으로는 ESG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 친환경자동차 의무 비중 보조금 폐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철폐 등이 있음

⑦ 산업 정책

-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정책은 ① 비경제적 가치 판단에 따른 규제 철폐, ② 상징적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③ 보조금 지원보다 세제 지원 선호 등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공화당 정강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AI, 디지털자산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 원리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
 - AI, 디지털자산 등에 대해서는 시장 활성화와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프라이버시, 탄소중립, 시장개입 등의 이슈를 차단하고 관련 규제를 철폐할 것으로 전망됨
- 전통 제조업, 우주 산업, 주택 산업 등 미국 내 위상이 높거나 관심이 집중되는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
 - 전통 제조업을 대표하는 철강, 자동차 산업의 경우 강한 수입 규제를 통해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미국의 글로벌 위상과 직결되는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와 민간 기업의 협력 강화가 예상됨
 - 한편, 국민들의 체감 경기에 많은 영향을 주는 주택 산업에 대해서는 경기진작을 위한 인위적인 부양책의 가능성이 높아 보임

11) 이후 바이든 행정부(2021년)는 행정 명령을 통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함.

- IRA 및 CHIPS에 의해 수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 차원에서 의도적 지연이나 수혜 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법률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존재
 - 미국 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에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IRA(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인플레이션감축법)’ 및 ‘CHIPS(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반도체 칩과 과학법)’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함
 - 이에, 동 법률의 적용을 막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개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데, 의회의 다수당이 공화당일지라도 당내 일정 부분 동 법률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 개정이나 폐지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존재함
 - 다만, 법률에 근거한 시행 과정에서 의도적 지연이나 외국 기업의 보조금 지급 자격에 대한 엄격한 적용 등을 통해 법률의 실질적 무효화를 도모할 가능성은 상존함

< 2024 미국 공화당 정강(2024 GOP PLATFORM)에서 언급된 산업 정책 >

산 업	언급된 산업 정책 내용
AI(인공지능) 산업	AI 혁신을 방해하는 바이든의 행정명령 ¹²⁾ 폐지 언론의 자유와 인류 번영에 뿌리를 둔 AI 개발 지지
디지털자산 산업	이전 정부의 암호화폐 단속을 방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설립에 반대 비트코인 채굴권 옹호 모든 미국인이 디지털 자산의 보유와 자유로운 거래 보장
우주 산업	우주에 대한 접근, 거주 및 자산 개발에 혁명을 일으킬 것
자동차 산업	이전 정부의 전기 자동차 의무 비율 ¹³⁾ 취소 중국산 자동차 수입 방지
주택 산업	신규 주택 구매자를 위한 모기지 금리를 인하 연방 토지 일부를 제한적으로 개방하여 신규주택 건설 허용 세금 인센티브와 최초 구매자 지원

자료: 2024 GOP PLATFORM 요약 및 정리.

12)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10월 30일,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보안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on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AI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지만, 안전, 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에너지 사용 등의 규제도 다수 포함됨.

13) 공식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의무 부담을 강제하지 않고 있으나, 2032년까지 전기차 판매량 비중을 56%,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판매량 비중을 13%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3. 「트럼프 노믹스 2.0」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1) 미국 수입 관세율 인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최근 세계 경제 상황

○ (글로벌 저성장) G2 활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산업 대전환기 진입 등의 요인으로 글로벌 경제 전반의 성장력이 약화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세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 펜데믹 이전 3%대 중반에서 향후 3% 내외 수준으로 낮아지는 저성장 기조가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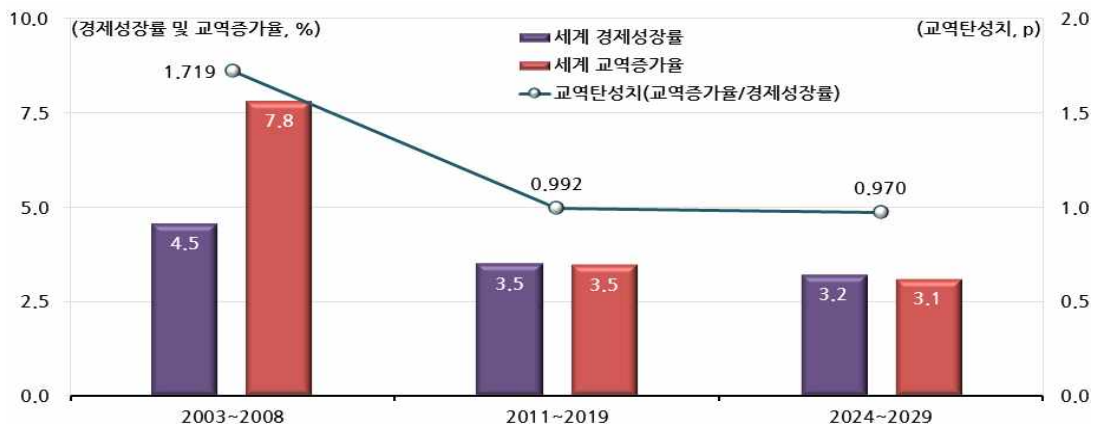
- 향후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및 중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 가능성이 높아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할 주력 경제권이 부재한 상황임

- 또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전반적인 교역 위축이 우려되면서, 무역이 창출하는 글로벌 부가가치가 이전에 비해 축소될 전망임

※ 세계 교역탄성치(교역증가율/경제성장률)는 2003~08년 연평균 1.719p에서 2011~19년 0.992p로 하락하였으며, 향후(2024~29년) 연평균 0.970p로 여전히 기준치 1.0P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산업 대전환기에 진입하면서 기존 주력 산업(기술)에서 초과 이윤을 확보하기 어려운 가운데, 차세대 산업(기술)의 시장 체화(embodiment)가 지연되면서 뚜렷한 비즈니스 창출 모델이 구축되지 않음

< 주요 기간별 연평균 세계 경제성장률 및 교역증가율 추이 및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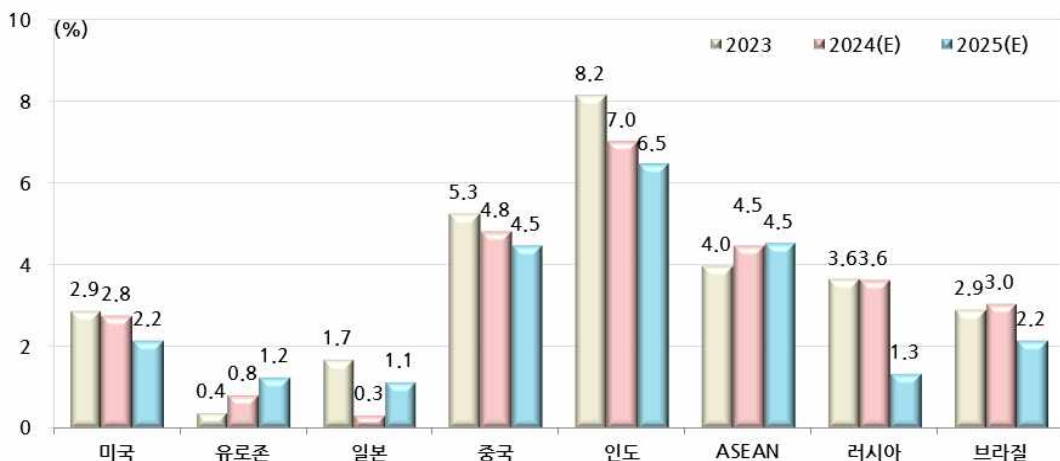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통계를 이용한 작성).

주: 교역증가율은 상품 수입증가율을 사용.

- (주요국 경제 상황) 단기적으로 2025년 대부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2023년을 정점으로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중국)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도모하고 있으나, 경제 심리의 위축과 재정 여력 약화로 저성장이 예상됨¹⁴⁾
- (유로존)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2022년 이후에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약화,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의 완화로 실질 소득이 개선되면서 소비가 완만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민감성이 완화되면서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최대 경제권인 러시아와 터키의 성장률 하락으로 미약한 회복이 예상됨
- (중남미) 지역 내 최대 경제권인 브라질의 성장 감속이 전망되어 전반적인 경제 활력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ASEAN) 중국 경제 성장 둔화의 부정적 영향 속, 글로벌 관광 시장의 활성화로 중성장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고성장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내수 경기 확장성의 제약으로 성장률은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중동 및 중앙아시아) 산유국 및 천연가스 생산국의 경우 에너지 가격의 약보합 전망과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등으로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됨

<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통계를 이용한 작성).

14) 자세한 내용은 【별첨 2】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참조.

② 대공황과 트럼프 1기의 세계 경제 사례

○ 1930년대 대공황 사례¹⁵⁾

- 1930년 미국에서 제정된 스무트-홀리(Smoot-Hawley) 법안을 시작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발생
 - 스무트-홀리 법안은 1930년 6월 17일 발효되었으며 2만 1,000개의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새로 부과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함
 - 스무트-홀리 법안의 평균 관세율인 60%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수입 관세를 높이며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된 계기가 됨
- 이에 따라 대공황 당시 세계교역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실물경제 위축 및 경기회복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
-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주요국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파국을 맞았던 과거 경험을 피하고자 WTO를 통해 세계 무역 질서의 기초를 세우고 자유무역기조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 트럼프 1기의 사례

-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2019년 세계 경제의 경기 하방 압력이 증대
 -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8년 3.6%에서 2.9%로 0.7%p가 하락하였으며,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2018년 2.3%에서 1.9%로 0.4%p가 하락하고, 개도국 성장률은 2018년 4.7%에서 3.7%로 1.0%p가 하락함
 - 여기에는 미·중 간 관세 전쟁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유로존과 중국 경제의 자체적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15) 자세한 내용은 【별첨 3】 1930년대 대공황 사례 참조.

- 세계 경제의 전반적 성장 둔화에도 미국 경제의 펀더멘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시현

- 2019년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모두 하락하였으나, 이것이 모두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18년 3.0%에서 2019년 2.6%로 하락하였으나, 그 수준 자체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이고 당시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인 3.5%를 장기간 유지함
- 유로존은 브렉시트 이슈로 미·중 관세 전쟁 이전부터 경기가 미약한 수준을 보임
- 중국 경제는 회색코뿔소(부동산 시장과 연관된 과도한 부채) 문제에 직면하여, 중국 정부가 신용에 대한 디레버리징 정책을 강화하면서 내수 경기가 침체됨
- 이에 따라 중국과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국가들이 대중 교역 경로를 통해 중국의 경착륙 영향이 파급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됨
- 또한 당시 OPEC이 감산 조치를 취할만큼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의 경제 상황도 부진한 모습을 보임

< 트럼프 1기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 < 트럼프 1기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통계를 이용한 작성).

국 가	2017	2018	2019
미 국	2.5	3.0	2.6
유로존	2.6	1.8	1.6
영 국	2.7	1.4	1.6
독 일	2.7	1.1	1.0
일 본	1.7	0.6	-0.4
브라질	1.3	1.8	1.2
러시아	1.8	2.8	2.2
인 도	6.8	6.5	3.9
중 국	6.9	6.7	6.0
ASEAN5	5.2	5.0	4.2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통계를 이용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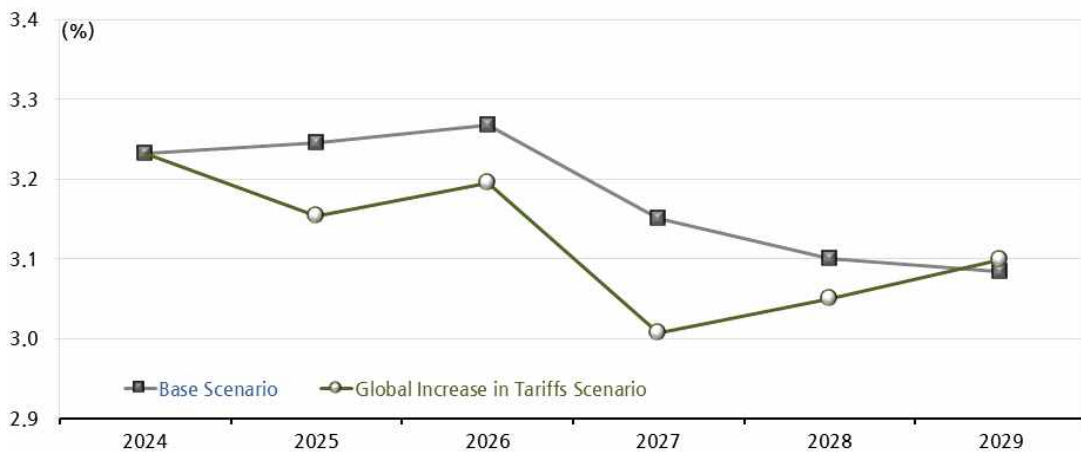
③ 미국 수입 관세율 인상이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¹⁶⁾

○ 트럼프 2기에 벌어질 미국의 수입 관세율 인상이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이나, 실제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하는 수준보다 미약할 가능성도 존재

- 미국의 수입 관세율 인상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IMF에 따르면 2025년 중반부터 미국, 유로존, 중국 간에 상호 수입 관세가 10%이고 미국의 이외 수입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도 10%가 항구적으로 부과될 때, 2025년 세계 GDP(경제 규모 자체)는 기존 전망 시나리오보다 0.1%p 감소하며, 2026년 0.2%p, 2027년 이후 0.3%p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이를 IMF의 기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 시나리오상 3.2%에서 3.1%로 낮아지며, 이후에도 최대 0.14%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¹⁷⁾

< IMF의 세계 GDP 대한 기존 시나리오 및 2차 관세 전쟁 시나리오를 이용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계산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자료를 이용한 계산).

16) 본 절의 내용은 IMF(2024)에서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경제성장률로 환산한 것임.
 17) 최근 IMF의 분석 자료에 대해 오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IMF는 다섯 단계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며, 1단계가 미국의 수입 관세 인상이고 이후 투자, 조세정책, 이민정책, 금융시장 조건 등이 추가되는 시나리오를 전제함. 흔히 언급되는 0.8% 감소는 다섯 가지 조건이 모두 작동될 때의 효과이고, 보고서에서 제시된 수입 관세율 인상 조건의 경우 0.1~0.3%의 GDP 감소효과가 있다고 밝힘. 또한 IMF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하락 폭(%p)이 아니라 GDP에 대한 감소분을 결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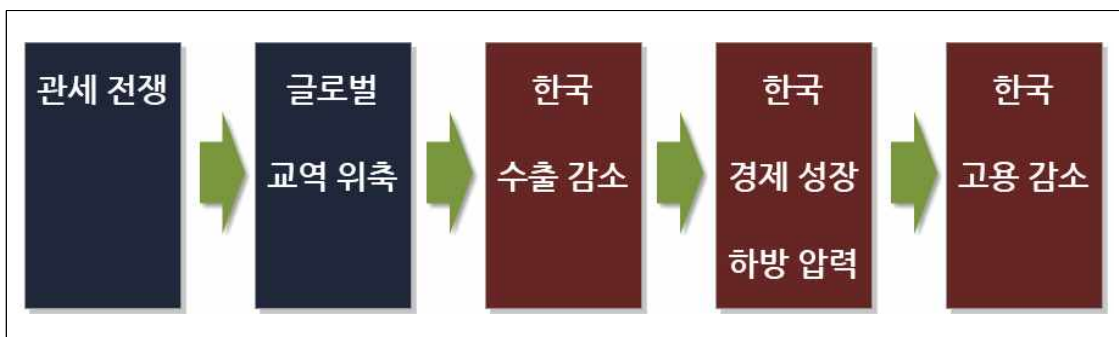
(2) 2차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¹⁸⁾

① 분석의 개요

○ 2차 관세 전쟁의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로

-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세계 평균 관세율 인상을 유발하여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한국의 수출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 고용 감소 압력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전제
 - 세계 시장의 관세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제품의 가격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장 수요가 둔화하는 압력이 있음
 - 나아가 교역재의 가격이 비교역재의 가격보다 비싸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에서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재화를 국산재로 대체하려는 유인이 상승함
 - 이에 따라 글로벌 교역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교역 위축은 한국 경제에 「수출 경기 하강 → 경제 성장 둔화 → 고용 감소」의 경로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글로벌 교역 전반이 위축되면, 특히, 한국과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경우 수출 감소가 경제성장률 둔화로 직결되면서, 고용 창출력도 동시에 약화됨

<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로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18) 구체적인 추정 방법은 【별첨 4】 세계 평균 관세율 변동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방법 참조.

○ 2차 관세 전쟁의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로

- 2차 관세 전쟁을 5개의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현대경제연구원(2018) 추정 결과 및 최근 주요국의 교역 비중을 고려하여 세계 평균 관세율 인상 폭을 추정

시나리오 1

-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60%까지 상향조정하는 상황을 전제로 함
 - ※ 중국의 대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이 현재 평균 19.3%(PIIE)에서 60%로 인상될 경우 세계 평균 관세율은 0.7%p 상승함

시나리오 2

-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60%까지 적용하고, 이에 중국 정부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수입 관세율을 60%까지 인상함
 - ※ 중국의 대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이 현재 평균 19.3%(PIIE)에서 60%로 인상되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이 평균 21.1%(PIIE)에서 중국 정부의 보복관세로 60%가 될 경우 세계 평균 관세율은 1.0%p 상승함

시나리오 3

- '시나리오 2(미중간 관세 전쟁)'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세계 나머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1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경우임
 - ※ 중국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현재 평균 3.0%(PIIE)에서 10%로 인상될 경우 세계 평균 관세율은 1.8%p 상승함

시나리오 4

- 시나리오 2(미중간 관세 전쟁)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에 대하여 10%의 보복관세율을

부과하는 경우임

※ 중국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이외의 국가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동일한 보복관세 조치를 취할 경우 세계 평균 관세율은 2.3%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시나리오 5

- 미국의 전방위적 수입 관세율 인상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모든 관세율이 평균적으로 약 10%에 이르는 경우임¹⁹⁾
- ※ 미국과 교역 거래를 하는 국가들에 대해 상호 관세 인상 조치가 지속(미국·중국 간 60%, 미국·세계 나머지 국가 간 10%)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만연으로 나머지 국가들 간에도 10%의 보편 관세가 고착화될 경우 세계 평균 관세율은 7.5%p 상승함

< 시나리오별 세계 평균수입 관세율 인상 영향 >

구 분	내 용	평균관세율 인상폭
시나리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 	0.7%p
시나리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 ▪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보복관세) 	1.0%p
시나리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 ▪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보복관세) ▪ 미국의 세계 나머지 국가 제품 수입 관세율 10% 적용 	1.8%p
시나리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 ▪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보복관세) ▪ 미국의 세계 나머지 국가 제품 수입 관세율 10% 적용 ▪ 세계 나머지 국가의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10%(보복관세) 	2.3%p
시나리오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 ▪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적용(보복관세) ▪ 미국의 세계 나머지 국가 제품 수입 관세율 10% 적용 ▪ 세계 나머지 국가의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10%(보복관세) ▪ 이외 모든 교역 거래 수입 관세율 10% 적용 	7.5%p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19) 2021년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약 200개국의 평균 관세율은 5.2%이며, 시나리오 5의 경우 미·중 간 상호 60% 관세와 세계 나머지 교역에 대해 10%를 가정하면 세계 평균 관세율은 산술적으로 11.2%가 됨.

② 분석 결과

- (세계 교역량 증가율 하락 압력) 미·중 간 관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세계 교역이 0.36~0.47% 감소하고,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세계 교역이 0.85~1.12% 감소함.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도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세계 교역은 3.60% 급락

시나리오 1

-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일방적 60% 관세율 인상시, 세계 교역증가율은 0.36% 감소함

시나리오 2

- 미국과 중국의 60% 관세율 상호 적용시, 세계 교역증가율은 0.4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 미·중 간 수입 관세율이 60%로 상향 조정되어도 세계 평균 관세율과 세계 교역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이유는 2023년 기준으로 미·중 간 교역(수출+수입)이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하기 때문임

시나리오 3

-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세계 나머지 국가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10%로 인상시, 세계 교역증가율은 0.85% 감소 압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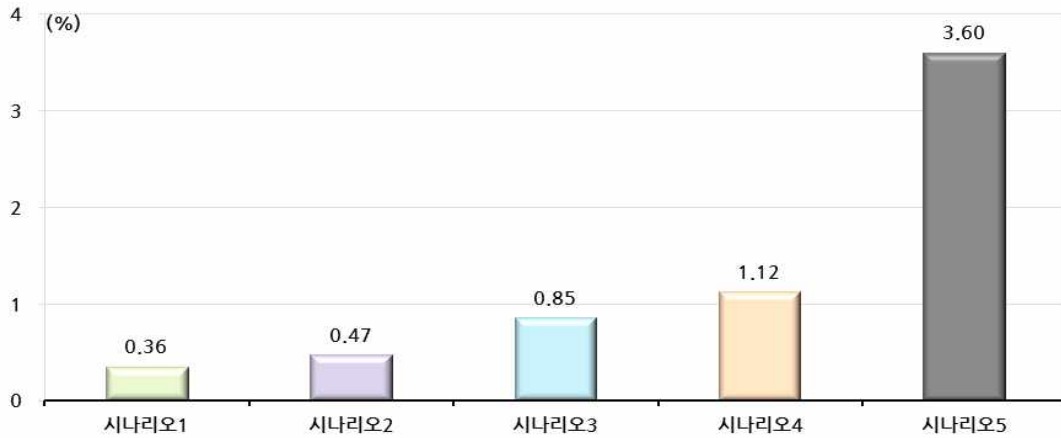
시나리오 4

-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나머지 국가의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가 이어질 경우, 세계 교역증가율은 1.12% 감소함

시나리오 5

-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간 교역 이외 세계 모든 교역에서 평균수입 관세율이 10%에 수렴할 경우 세계 교역증가율은 3.60% 감소하는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2차 관세 전쟁의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 하락 영향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 수출 감소 압력) 미·중 간 관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한국 수출은 142.6~150.0억 달러 감소하고,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174.1~191.0억 달러 감소.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도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한국 수출은 347.4억 달러 감소²⁰⁾

시나리오 1

-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일방적 60% 관세율 인상시, 2023년 수출 규모를 기준으로 한국 수출증가율은 2.26% 감소하고 수출 규모는 142.6억 달러가 감소 압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시나리오 2

- 미국과 중국의 60% 관세율 상호 적용시, 한국 수출증가율은 2.37% 감소하고 수출 규모는 150.0억 달러가 감소 압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시나리오 3

-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세계 나머지 국가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10%로 인상시, 한국 수출증가율은 2.75% 감소하고 수출 규

20) 한국 수출액 감소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2000년 이후 세계 교역량 연평균 증가율과 세계 교역액 연평균 증가율의 격차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한국 수출액 증가율이 세계 교역액 증가율과 동조성을 가진다는 전제하에서 분석함. 실제 동 기간 세계 교역액 증가율과 한국 수출증가율은 동일한 값을 가짐.

모는 174.1억 달러가 감소 압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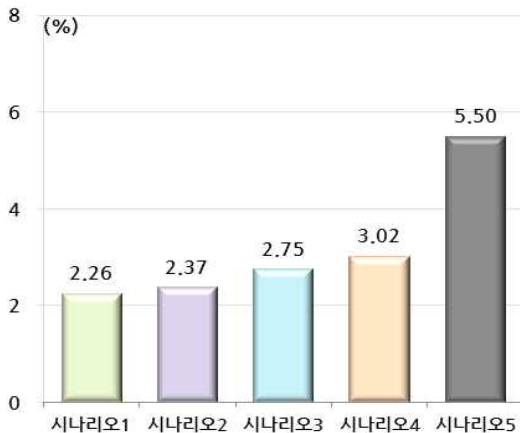
시나리오 4

-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나머지 국가의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가 이어질 경우, 한국 수출증가율은 3.02% 감소하고 수출 규모는 191.0억 달러가 감소 압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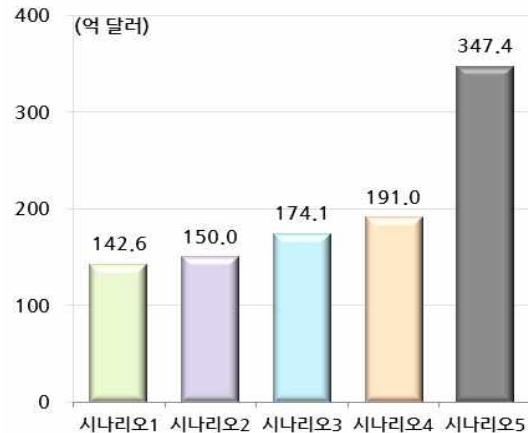
시나리오 5

-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간 교역 이외 세계 모든 교역에서 평균수입 관세율이 10%에 수렴할 경우 한국 수출증가율은 5.50% 감소하고 수출 감소 규모는 347.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2차 관세 전쟁의 한국 수출증가율 감소 영향 > < 2차 관세 전쟁의 한국 수출규모 감소 영향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 미·중 간 관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감소하고,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0.6%p 감소.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도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1.1%p의 하락 압력이 발생

시나리오 1

-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일방적 60% 관세율 인상시, 2023년을 기준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은 0.46%p 내외의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됨

시나리오 2

- 미국과 중국의 60% 관세율 상호 적용시, 2023년을 기준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은 0.49%p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시나리오 3

-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세계 나머지 국가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10%로 인상시, 2023년을 기준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은 0.57%p 감소하는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시나리오 4

-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나머지 국가의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가 이어질 경우, 2023년을 기준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은 0.62%p 감소하는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시나리오 5

-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간 교역 이외 세계 모든 교역에서 평균수입 관세율이 10%에 수렴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은 1.14%p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한국 고용 감소 압력) 미·중 간 관세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한국 취업자수 감소 폭은 약 12만 8,000~13만 5,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발생하면 15만 7,000~17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미국과 거래하지 않는 세계 모든 국가도 관세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고용 감소 폭은 31만 3,0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

시나리오 1

-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일방적 60% 관세율 인상시, 2023년을 기준으로

국내 취업자 수는 약 12만 8,000명의 감소 압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시나리오 2

- 미국과 중국의 60% 관세율 상호 적용시, 2023년을 기준으로 국내 고용 규모는 약 13만 5,000명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함

시나리오 3

-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세계 나머지 국가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10%로 인상시, 2023년을 기준으로 고용 규모는 약 15만 7,000명의 감소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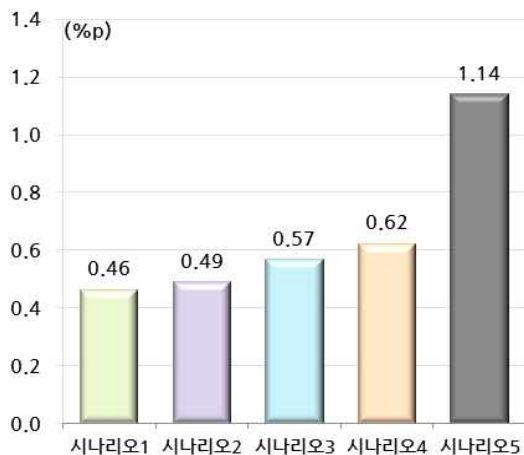
시나리오 4

-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나머지 국가의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가 이어질 경우, 2023년을 기준으로 고용 규모는 약 17만 2,000명 감소하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시나리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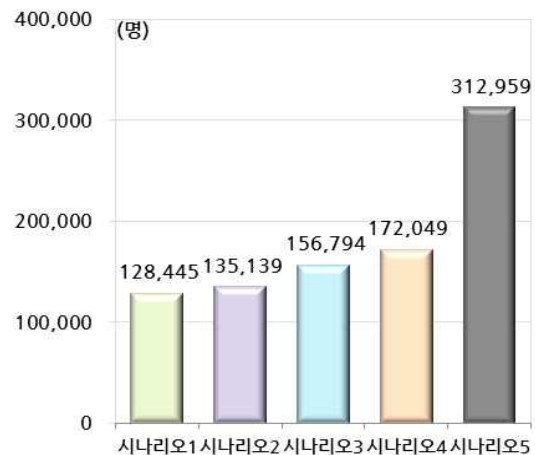
-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간 교역 이외 세계 모든 교역에서 평균수입 관세율이 10%에 수렴할 경우 국내 취업자 수는 약 31만 3,000명이 축소될 것으로 추정됨

< 2차 관세 전쟁의 한국 경제성장률 감소 영향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2차 관세 전쟁의 한국 취업자수 감소 영향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4. 시사점

첫째, 「트럼프 노믹스 2.0」의 핵심 전략인 수입 관세 인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 트럼프 1기의 세계 경제 및 한국 경제 지표들의 악화에는 관세 인상의 효과도 있지만, 개별 국가들의 자체적인 경기 하방 리스크도 존재했기 때문에, 당시와 같은 규모의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움
- 또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높지만,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리 최근 중국 경제의 상황이 관세 전쟁을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산 원자재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일정 부분 타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반대로 중국 정부가 어려운 국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강경 대응도 가능한 상황임
- 특히, 대 중국 관세 인상보다 보편 관세 인상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보편 관세 인상의 미국 내 법적 절차상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나아가, 해외 언론이나 해외 기관들의 「트럼프 노믹스 2.0」에 대한 비판적 분석 기사를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고, 한국 경제의 관점에서 실제 충격이 어느 정도일 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둘째, 당연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 가능성에 대응하여 민·관의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우선 통상 당국은 무역 분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위기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EU는 트럼프 1기에서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인상으로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EU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신속 대응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고 미국 대선 이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위기 대응 시스템을 움직이는 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데, 정치·외교, 통상, 경제 분야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고 직관력이 뛰어난 실질적인 전문 인력의 확충이 요구됨
 - 한편, 정부 및 관련 기관과 기업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공조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분쟁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임
 - 주요 수출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보호무역 조치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미국의 관세 인상은 글로벌 시장의 통상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도 주요 거래 대상국의 무역 정책 및 법 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력 강화와 그 영향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 능력을 확충해야 할 것임
 - 특히 보호무역에 대한 현지 시장의 언론과 소비자의 동향을 살피고, 관련 기업들과 기술 제휴 등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및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셋째, 우리 통상 당국과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접근 시 현지에서 「트럼프 노믹스 2.0」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자제하고, 한국 경제의 발전이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피력해야 한다.
- 우선, 미국 시장 접근을 위해 민·관이 모두 포함되는 채널을 구축하여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함

- 특히, 미국 내에서 의회, 소비자 단체, 기업협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통을 하되, 한국이 「트럼프 노믹스 2.0」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임

넷째, 트럼프 1기와 달리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 이외의 대규모 무역 적자국에 대한 통상 갈등이 '2차 관세 전쟁'의 주된 이슈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및 다양한 통상 압박이 미국 통상 당국의 주된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 통상 전략 간에 다양한 조합이 있고, 과거에 비해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져 있으며 미국의 대 중국 관세 인상이 시행되기까지 많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무역수지 적자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 또한, 1차 관세 전쟁의 주된 타겟국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미국 내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정책에 대해 여론이 과거와 같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 이에 중국 다음의 무역적자국인 멕시코와 베트남, 그리고 경제권 전체로는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와 비슷한 EU에 대해 다양한 보호무역주의적 통상 정책이 선호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다섯째, 글로벌 교역 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미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그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

- 글로벌 자국이기주의가 확산될 경우 글로벌 금리 및 환율 전쟁으로 이어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이 기본적으로 확장적 기조를 가지기 때문에, 풍부해진 유동성이 Sollim 현상을 통해 금융 및 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급증시킬 우려가 존재함
- 따라서, 금융 당국은 국내 금융·자산 시장의 자체적인 건전성 제고와 해외 투기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임

여섯째, 「트럼프 노믹스 2.0」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수출 경기의 회복력이 약화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수출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 수출 품목 및 지역의 다변화, 현지화 등을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 능력 강화가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현재와 같은 중간재 중심에서 최종재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기업 사업 전략 및 산업 정책 기조가 요구됨
- 특히 인도, 아세안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이 요구됨

일곱째, 한국 경제가 수출 경기에 상당 부분 성장을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상 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의 자체적 펀더멘털의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 통상 환경의 악화가 국내 경제 리스크 요인들과 결합하지 않도록 한국 경제 자체의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안정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최근 내수(소비)의 회복력이 매우 미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수출 침체 가능성에 대응하여 민간 부문의 실질 구매력 확충을 위한 거

시·미시적 내수 활성화 노력에 경주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 등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의 내구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트럼프 노믹스 2.0」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버리고, 그 근간에 미국 사회가 중요시하는 아젠다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전략적인 대응이 따라준다면 이번 미국의 정권 교체가 한국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요구된다.

- 이미 「트럼프 노믹스」에 대해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정부와 민간이 큰 혼란에 빠지는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과거 트럼프 1기에서도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나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일정 부분 우리 기업들이 활로를 찾아 나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대응 솔루션은 존재함
- 특히, 우리 최대 경쟁국인 중국의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한·미 통상 당국 간 우호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면 그 반사 이익으로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접근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고 세계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미국의 사회 내 여론을 이해하고 이에 따르는 정치적 지형 변화를 면밀히 살펴, 그 흐름에 따라가면서 한국 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임

【별첨 1】 참고문헌

□ 해외 문헌

Bouët, Antoine, Sall, Leysa Maty and Zheng, Yu(2024). Trump 2.0 Tariffs: What Cost for the World Economy?, CEPII Policy Brief, No. 49 - October 2024.

Bown, C. P.(2024). “The US - China trade war and phase one agreement”, PIIE Working Papers 21-2,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Caldara, Dario, Matteo Iacoviello, Patrick Molligo, Andrea Prestipino, and Andrea Raffo(2020). “The Economic Effects of Trade Policy Uncertainty.”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09 (January): pp. 38-59.

Carton, Benjamin, Corugedo, Emilio Fernandez and Hunt, Benjamin(2019). “Corporate Tax Reform: From Income to Cash Flow Taxes.” IMF Working Paper 13/5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Derek, Anderson, Hunt, Benjamin, Kortelainen, Mika, Kumhof, Michael, Laxton, Douglas, Muir, Dirk, Mursula, Susanna and Snudden, Stephen(2013). “Getting to Know GIMF: The Simulation Properties of the Global Integrated Monetary and Fiscal Model.” IMF Working Paper 2013/05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Eichengreen, B. and O'Rourke, K.H.(2009). A Tale of Two Depressions, Unpublished Manuscript.

IMF(2018a). 『World Economic Outlook(April 2018)』 .

IMF(2018b).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18)』 .

IMF(2019a). 『World Economic Outlook(April 2019)』 .

IMF(2019b).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19)』 .

IMF(2024).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24)』 .

Restuccia, Andrew and Leary, Alex(2024). Trump Economic Advisers Float Three Names for Fed Chair, Wall Street Journal(March 17).

Riley, B.(2023). Trump Promises “Massive” Tax Increase if Returned to Office. National Taxpayers Union, Blog, August 29.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2024). 『GOP PLATFORM MAKE AMERICA GREAT AGAIN!』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2022). 『State Energy Production Estimates 1960 Through 2022』 , EIA.

Wolff, A.W.(2024). Trump II Tariffs: Who said he could do that?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Realtime Economics - Special Project Election 2024, Assessing presidential economic platforms, September 3.

YouGov(2024). 『The Economist/YouGov Poll』 .

□ 국내 문헌

김동석(2004).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KDI 경제
전망 2004년 2/4, pp. 112-121.

양동휴(2009).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2008년 위기”, 금융경제연구, 2009.11, 한
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2016a). “아시아 분업 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
로서의 역할 확대”, 경제 주평, 16-27.

현대경제연구원(2016b).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16-28.

현대경제연구원(2016c). “美中の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경제주평,
16-41.

현대경제연구원(2017). “트럼프 노믹스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평,
17-04.

현대경제연구원(2018a). “관세 전쟁발 수출절벽 대응을 위한 내외수 균형전략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18년 1분기)”, 경제주평, 18-10.

현대경제연구원(2018b). “관세 전쟁의 시작과 한국경제의 위기”, 현안과 과제,
18-11.

현대경제연구원(2018c). “무역 전쟁이 중국의 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
점”, 경제주평, 18-27.

현대경제연구원(2023d). “빅리그 스포츠 스타의 경제적 효과- 소비재 수출과 그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경제주평, 23-13.

현대경제연구원(2023e). “대 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

점”, 현안과 과제, 23-11.

현대경제연구원(2023f). “하반기 주요국 경기 판단 및 전망 - 디커플링되는 주요국 경기 속 커지는 중국 리스크”, 현안과 과제, 2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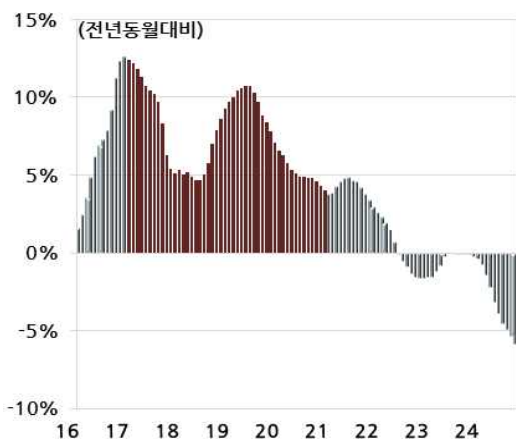
현대경제연구원(2024a). “경기 회복 기대감 속 수출-내수의 경기 양극화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4년 1분기)”, 경제주평, 24-04.

현대경제연구원(2024b). “피벗(pivot)까지 남은 시간, 경제심리 안정을 위한 ‘브릿지 전략’ 필요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4년 2분기)”, 경제주평, 24-08.

【별첨 2】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 중국 경제가 중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2024년과 2025년 모두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5%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다른 국가와 달리 엔데믹에 따른 보복소비의 실종, 적절한 경기부양책의 부재 등으로 활력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 소비는 리오프닝 및 기저효과로 증가세를 기록 중이나,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최근 수출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생산 활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과잉생산 능력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 중임
- 경기 침체의 진앙지인 주택시장 불황이 장기화되고 실질적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 헝다그룹(中國恒大集團), 비구이위안(碧桂園), 완다그룹(萬達集團) 사태로 이어지는 중국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 중임
 - 최근 가격 하락 폭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제 성장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임
 - 특히,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에도 주택시장, 물가, 소비가 반응하지 않고 있어, 중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경제심리 위축으로 통화정책 효과가 미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우려됨

< 중국 주택가격지수 증가율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국가통계국 통계를 이용한 작성).

< 중국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 상승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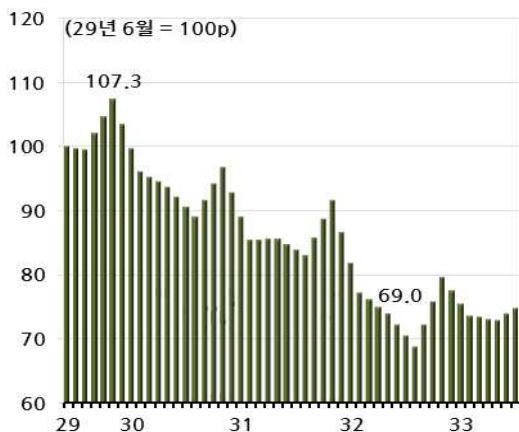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국가통계국 통계를 이용한 작성).

【별첨 3】 1930년대 대공황 사례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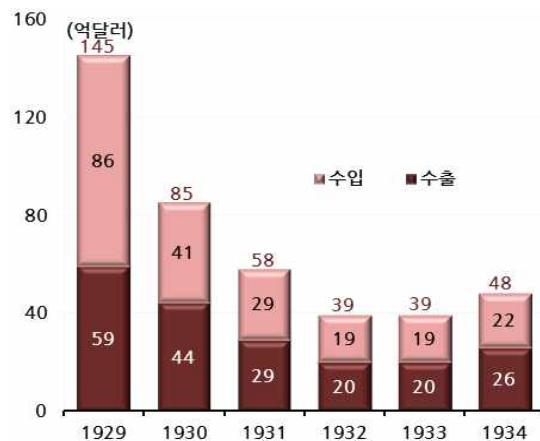
- 대공황 당시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세계교역량은 1β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실물경제 위축 및 경기회복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
 - 1930년 미국에서 제정된 스무트-홀리(Smoot-Hawley) 법안을 시발점으로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발생
 - 스무트-홀리 법안은 1930년 6월 17일 발효되었으며 2만 1,000개의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새로 부과하거나 관세율을 인상
 - 스무트-홀리 법안의 평균 관세율인 60%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수입 관세를 높이며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된 계기가 되었음
 -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주요국들의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 등으로 대공황 당시 세계교역량은 물량 기준으로 약 30%, 금액 기준으로는 60% 이상 축소
 - 경기 정점이었던 1929년 6월 대비 세계교역량(물량 기준)은 1년 후 약 8%, 1932년 8월까지 약 31% 감소하였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1929년 1분기 약 84.4억 달러에서 1933년 1분기 약 30.4억 달러로 60% 이상 감소함
 - 미국의 교역량은 금액 기준으로 1929년 약 145억 달러에서 1932년 약 39억 달러까지 감소함

< 대공황 당시 세계 교역량 추이 >



자료: Eichengreen & O'Rourke(2009) 인용.
주: 물량 기준.

< 대공황 당시 미국 교역액 추이 >



자료: BEA.

21) 본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2018)에서 인용.

-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영향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은 큰 타격
 - 세계 산업생산은 1929년 6월과 비교하여 1년 후 약 15% 감소하였으며 1932년 7월에는 40% 가까이 감소함
 - 세계 주식시장은 1929년 6월 대비 1년 후 약 20% 줄어들었으며 1932년 6월에는 약 70%까지 감소함

- 실물경제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에서 실업자들이 급증
 - 미국의 경우 대공황 이전 제조업 실업률은 약 7.7%에서 대공황 기간 26.1%까지 급증하였으며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실업률 역시 크게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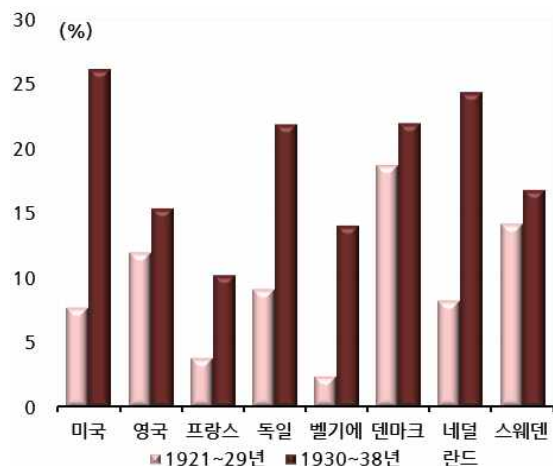
-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은 세계교역량을 급감시켜 글로벌 경제가 장기 침체로 이어짐
 - 미국의 스무트-홀리 법안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은 여타 국가로 빠르게 퍼지며 세계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짐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국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파국을 맞았던 과거 경험을 피하고자 WTO를 통해 세계 무역 질서의 기초를 세우고 자유무역 기조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함

< 대공황 당시 세계 산업생산 및 주가 추이 >



자료: Eichengreen & O'Rourke(2009) 인용.

< 대공황 당시 주요국 제조업 실업률 변화 >



자료: 양동휴(2000) 인용.

【별첨 4】 미국의 수입 관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방법

① 시나리오별 세계 평균 관세율 인상 폭 계산

- ‘미국 - 중국’, ‘미국 - 세계 나머지’ 경로의 교역이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비중과 PIIE의 각각의 관세율 통계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별 세계 평균 관세율 인상 폭을 도출

② 세계 평균 관세율에 대한 세계 교역증가율의 탄성치 계산²²⁾

- 전 세계적으로 관세율이 약 1%p 높아질 때 국가들의 교역량은 평균적으로 약 0.4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분석 기간과 추정 방법

- 추정방법은 내생성을 고려하여 동태적 패널회귀모형을 사용하며, 시스템 GMM(Arellano-bond estimator) 방식으로 추정함

$$\begin{aligned} \text{Intrade}_{i,t} = & \alpha + \beta_1 \text{Intrade}_{i,t-1} + \beta_2 \text{tariff rate}_{i,t} + \beta_3 \ln \text{GDP}_{i,t} \\ & + \beta_4 \text{Financialopeness}_{i,t} + \beta_5 \text{d_crisis}_t \\ & + \beta_6 \text{d_developed}_i + e_{i,t} \end{aligned}$$

- trade: 국가별 교역량, tariff rate: 관세율,
- GDP: 국내총생산, Financialopeness: Chinn-Ito 지수,
- d_crisis: 금융위기 더미, d_developed: 선진국 더미, e: 오차항

- 분석기간은 1988년부터 2016년까지며 분석대상은 자료가 존재하는 선진국 35개국, 개도국 171개국 등 총 206개국에 대한 불균형패널 자료임²³⁾
- 종속변수는 국가별 수출과 수입을 합친 총교역량이고, 설명변수로 국가별 평균 관세율과 국내총생산(GDP), 국가별 개방 정도를 통제하기 위한

22) 이하 자세한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2018b) 참조.

23) 선진국과 신흥국은 IMF(2014.10)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분석의 편의를 위해 분석기간 전체를 선진국으로 분류함. 한편, 현대경제연구원(2018년)의 발표 시점과 현재의 시차 문제가 있으나, 최근까지 분석 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경제 산업 구조상의 교란 현상이 오히려 분석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현대경제연구원(2018)의 탄성치 추정 결과가 현재에도 적용된다는 가정을 함.

Chinn-Ito 자본개방지수, 그리고 금융위기 연도 더미 등을 포함함

- 평균 관세율은 국가별, 연도별로 결측치가 존재하는 경우 2년 이내 결측치에 대해서만 선형보간법을 적용함

③ 세계 교역증가율의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계산

- 세계 교역증가율 변화에 대한 한국 수출증가율 변화 계산

- 교역 단가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선진국 및 개도국 교역증가율에 대하여 우리나라 수출의 선진국 및 개도국 비중(47.2% 및 52.8%)을 이용, 수출증가율 및 수출 규모의 변화를 추정함

- 수출 규모 변화에 대한 경제성장률 변화 계산

- 명목 금액 수출 규모 변화에 대하여 환율 및 수출의 GDP디플레이터를 이용, 수출의 감소가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²⁴⁾

- 수출 규모 변화에 대한 고용 변화 계산

- 명목 금액 수출 규모 변화에 대하여 산업연관표상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취업자 변동 폭을 추정함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24) 김동석(2004), 현대경제연구원(2018a, 2018b, 2018c, 2023d, 2023e) 참조.